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인 쇄 2004년 12월

발 행 200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5,000원

© 통일연구원, 200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 이금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 ; cm. — (연구총서 ; 04-18)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260-8 93340

340.911-KDC4

320-9519-DDC21

CIP2004002263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II. 민간 남북교류협력의 의미와 추진배경	5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념 규정 및 의의	5
2.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배경	7
III.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분야별 현황	17
1.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7
2. 분야별 추진실태	24
IV. 민간단체의 지원사업 평가	39
1. 일반사회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평가	39
2. 민간단체들의 해외원조활동 평가	44
V.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평가	49
1. 평가의 틀	49
2. 사업계획 수립	50
3. 사업추진과정의 감독(Monitoring)	62
4. 자체 사업평가	73
5. 향후과제	76
VI. 결론	89
참고문헌	93
최근 발간자료 안내	99

표 목 차

<표 II-1>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2004.10)	12
<표 III-1> 민간 대북지원 규제완화 조치경과	18
<표 III-2> 대북지원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19
<표 III-3> 연도별 대북지원민간단체 방북인원	23
<표 III-4> 분야별 대북지원민간단체의 협력사업	24
<표 III-5> 복지재단 지원수혜대상 규모 및 지역	27
<표 V-1> 유진벨재단의 분배투명성 확보노력	68
<표 V-2> 의료분야 협력사업과 기술지원현황	72
<표 V-3>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사업의 연도별 사업의 유형 변화 · 76	
<표 V-4> 1996~2002 OECD DAC 회원국/기구의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의 분야별 분포	87

서론

I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시민사회의 참여가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정부의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비정부기구들(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의 정책참여에 대한 인식도 매우 빠르게 확산되어왔다. 이는 민간영역의 활동이 정부영역과 함께 국가정책 및 국제적인 사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반적 주체로 기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새로운 행위주체로서 등장한 민간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틀이 될 수 있다.

남북한 관계에서도 민간단체는 교류협력사업을 매개로 대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과 평화변영정책을 토대로 당국 간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1995년 이후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추진되어 온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민간단체들의 대북 사업 활동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민간단체들은 독자적인 목표와 원칙에 기반 하여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민간단체들의 활동은 사회문화분야의 단순한 교류행사 추진에서부터 지속적인 협력사업의 추진 등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1995년 북한의 수해발생 이후 추진되어 온 대북지원에도 민간단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왔으며, 일부 단체들은 협력사업의 방식으로 대북 교류를 추진하고자 노력하여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은 식량 등 긴급구호에서 농업축산, 보건의료분야의 개발구호 사업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협력사업의 요구와 범위가 교육, 문화, 경제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남한과의 교류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 대북 인도 지원 및 교류협력사업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보다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가 민간을 조정하려는 접근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민간을 활용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이제까지의 대북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 지원사업의 방향과 세부방안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이 추진된 배경과 의미를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대북지원민간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정과 분야별 추진실태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대북지원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사회단체의 교류협력 및 대북지원민간단체의 해외원조사업과 비교분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연구원을 주축으로 한 민간남북교류협력연구회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 졌다. 각 개별 민간 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에 의해 남북협력사업 으로 승인된 사업들을 개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한 협력사업들이 심층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각 개별단체별 교류협력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무자 간담회 개최와 함께, 개별단체의 자체평가보고서 등 관련 기록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민간단체의 정책참여 요구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국내 민간단체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남북관계를 보다 발전시켜가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간 남북교류협력의 의미와 추진배경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념 규정 및 의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은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협력사업은 남북 간의 다양한 방식의 공동사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협력’의 방식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업실행에 필요한 재정 및 인적자원을 양측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산출물을 공유하는 사업의 방식을 지칭한다. 그러나 일반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의 경우에는 단순한 교류 혹은 공동행사인 경우에도 협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은 관련 법률에¹ 규정된 바와 같이 협력사업자 승인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 간의

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장 30조는 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을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최근 3년 이내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 등을 갖추고 있을 것,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력사업은 그 개념 및 시행 절차상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은 대부분 공동행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지속성 여부는 크게 중요시 되지 않고 있다. 협력사업자의 승인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협력사업 상대방에 대한 소개서, 협력사업 상대방과의 합의서, 북한당국의 확인서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중요시 하는 것은 협력사업의 실현가능성, 남북 간 분쟁사유 여부, 기타 협력사업과의 경쟁유발가능성, 사업자의 수행능력,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 저해가능성 여부이다. 또한 정부는 실제 남북협력사업의 진행과정을 관리조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즉 남북협력사업자는 북한측 상대방과의 사업약정 혹은 계약체결, 사업착수, 진행상황, 사업만료, 약정 혹은 계약의 해지·해제를 통일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협력사업자는 통일부에 대해 정기적인 사업진행상황을 매 분기별로 종료일 2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은 남북이 상호 접촉과 대화를 통해 남북 간의 화해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부여되어 왔다. 동서독 간에도 ‘상호접근을 통한 변화’를 일관되게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서독정부는 동독에 대해 정치적 대응보다는 비정치적 차원, 즉 민간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정치적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으며, 동독도 실리추구 차원에서 서독의 교류협력에 참여하여 왔다. 이와 같이 남북교류협력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 및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 의존관계를 수립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즉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비정치적 접근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북한을 직접 자극하거나 정치적 대응을 야기하지 않고 북한의 사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의 정부 이래 대북포용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추진되어 왔다.

2.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배경

1988년 7·7선언 이후 남북교류 및 협력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학생·학자·제반 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언론기관·정당 등 각계각층에서 남북교류 및 협력제외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시행된 이후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초기에는 주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1995년 이래 북한 식량난으로 인한 국제사회 지원 요청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 민간교류의 규모나 성격이 크게 변화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초기 남북교류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양 정부의 대결구도에 따른 제한된 교류로서 양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변수가 많았고, 순수한 민간교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즉 창구가 다원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 정부의 제재와 간섭으로 인해 순수 민간교류를 성사시키기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양측 정부의 기본입장을 넘어선 교류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초가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설정되면서 민간교류 상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북측의 경우에는 당의 전반적인 대

남 혹은 외교전략이 남북교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남북 여성교류는 주제면에서도 ‘정신대문제’²가 가장 핵심사안이었으며, 이는 북한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시 외교적으로 부각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성평화운동도 국제사회의 핵사찰 요구 등 북한의 시각에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당국의 정치적 교적 가치판단에 의해 유용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한해 남북교류가 실현되었다. 정신대문제는 남북한 여성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문제이나, 북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맥락은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신 여성문제와 관련된 시각에서 조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기존 남북 민간교류는 특정 소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남한은 재야 민간운동가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북한은 정부측 인사들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북한은 순수한 민간단체가 없다는 점에서 교류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류의 참여자가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교류 일정이 행사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성과가 일반주민에게 파급되지 못하였다. 기존 교류시 일반주민들과의 접촉이나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삶을 느끼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²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남북한 정부간에는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즉 북한은 국제적 민간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중요시하고, 일본정부를 상대로 남북 정부의 공동대응을 촉구하였다. 1992년 2월 제6차 고위급 회담시 식민지 지배하의 민족 피해에 대한 공동대응책 협의를, 1992년 3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였다. 1992년 6월에는 3월에 제의한 민족 공동위에 대한 공동 결의문 채택을 제의하는 등 남한 정부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대해 남한측은 1965년 조약에 구속당한 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외교적 현안으로 삼지 않겠다는 소극적 입장에서 민족적 공동대응 요구에 호응하지 못하였다.

셋째, 북한은 남한대표의 북측 초청에는 적극적이면서도, 남측의 북한대표 초청 수용은 매우 꺼려하여 왔다. 예를 들어 북한은 정신대 문제의 경우와 같이 특정사안에 대해 상호연대활동을 중요시하면서도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북측 대표의 남측방문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최대한 막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교류가 학술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동일한 내용의 발표와 토론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단기간 내 동일한 주제에 대한 입장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며,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는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협력 추진’이라는 대북포용정책기조 하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기반으로 정치·군사적 문제를 여타 대북 교류 및 협력활동과 연계시키지 않음으로써,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민간차원의 대북교류와 협력이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6·15남북공동선언 4항은 “남과 북은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전 민간 통일활동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진보적 재야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강화됨으로써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교류의 폭이 증가하였고, 교류의 방식에서도 이전과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는 6·15공동선언의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민간단체 공동행사 명목의 대규모 교류 형태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10월 민간단체의 ‘노동당 창건행사’ 참관 이후 농민, 여성단체, 청년학생 등의 대규모 교류행사를 통한 부문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³ 이러한 대규모 행사는 금강산관광, 백두산 관광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기도 하였다. 3·1절 민족대회, 부산아시아게임 및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참가, 제주민족평화축전 개최 등 대규모 방남행사와 평양실내체육관 개관 행사, 8·15 남북공동행사, 평양노래자랑 등 방북행사를 통해 남북간 교류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남북 간 상호 이해의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8·15 남북공동행사, 개천절 남북공동행사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사된 것도 이전의 교류협력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남북교류에 참여하는 계층이 다양화된 것도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둘째, 민간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관련부처들도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을 주도하여 왔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민간의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남북 화해 및 신뢰형성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왔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이전의 남북교류는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 제3국에서 이루어졌으나, 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한 직접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에 대규모 기자단이 동행하면서 취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남북당국이 모두 민간의 남북교류협력을 6·15 공동선언 정신의 실현이라고 인식하여 적극 지원하여 왔다.

셋째, 남측 민간단체는 교류성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북측과의 부문별 대화를 지속시켜 오고자 하였다. 실제소요 경비이외에

³ 배성인·윤홍석, “김대중정부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평가와 과제,” 『극동문제』 (2003.5), pp. 14-36.

교류와 함께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해 민간단체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⁴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지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또한 민간단체들도 향후 교류를 염두에 두고, 북측의 요구를 수용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각 사례에 따라 이러한 지원형식이 다양하게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 교류와 함께 수반된 지원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교류가 지속되면서, 북한 측은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경제적 이익과 대외홍보를 통한 이미지 개선이라는 실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사회문화분야에서도 남북한 협력사업이 대폭 확대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지원계획」 등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었으며, 남북 당국간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⁴ 정현백, “남북화해와 NGO의 통일운동,”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통일연구원·서울대 통일포럼 공동학술회의 (2004.6.17).

<표 II-1>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2004.10)

사업자	사업 상대자	사업 내 용(지역)	금 액	사업자 승인일 (사업승인일)
▲대한탁구 협회	북한탁구 협회	제41회세계선수권대회('91.4.24 ~5.6)남북단일팀 구성·참가 (일본)	7억 9천만원 (남북협력기금)	'91.3.21 ('91.3.21)
▲대한올림픽 위원회	북한올림픽 위원회	제6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 회('91.5.27~6.4)남북단일팀 구성·참가(포르투갈)	1억 6천만원 (남북협력기금)	'91.5.1 ('91.5.1)
▲통일문화 연구소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조선중앙 역사박물관	북한문화유적 답사·조사 (북한지역 역사유적지)	6만불	'97.12.10 ('97.12.10)
문화방송	금강산국제 관광총회사	북한의 자연경관 및 명승고적 TV 프로그램 촬영(평양, 개성, 백두산, 금강산 등)	60만불	'98.3.13
국립공원 관리공단	산림과학원 (국토환경 보호성 산하)	남북간 국립공원 교류협력사업 증진사업	미 정	'99.7.21
▲SN 21 엔터프라이즈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민족통일음악회 방북공연	60만불	'99.8.5 ('99.8.5)
▲(주)현대아 산·현대건 설(2000.3.8) 현대자동차 등 13개사 (추가) (2000.7.4)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남북 체육 교류사업	4,776만불 (남북한총 투자액 : 5,627만불)	'99.9.2 ('99.9.20→ '00.3.8 변경승인, '00.7.4 변경승인 '03.4.10 변경승인)
▲(주)계명 프로덕션	조선예술 교류협회	평양교예단 한국방문 공연	50만불	'99.9.22 ('99.9.22)
▲(주)네오비전	조선백호7 무역회사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50만불	'00.2.3 ('00.2.3)
평화의 숲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산림조성 및 보호를 위한 종자·묘목·장비 지원	4억원	'00.4.12
▲기독교대한 감리회 서부연회	조선기독교 도 연맹	평양신학원 재개원 및 운영 지원	60만불	'00.5.20 ('01.1.12)

사업자	사 업 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금 액	사업자 승인일 (사업승인일)
▲NS21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550만불	'00.5.23 ('00.5.23)
▲한민족문화 네트워크연 구소(단독)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북한 문화자료 정보화사업	50만불	('00.7.14)
▲한민족복지 재단(합영)	라선경제 협조회사	제약공장 설립 및 병원운영 (나진·선봉)	240만불	'98.4.8 ('98.6.5)
▲스포츠아트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북한의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관련 방송영상물 제작(평양,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60만불	'98.4.29 ('98.4.29)
▲한국사진 학회	조선사진가 동맹중앙위원회	남북사진작품전(서울,평양) 및 사진집 출판(2,000부)	1억8천만원	'98.4.29 ('98.4.29)
▲한민족문화 네트워크연 구소(합영)	금강산국제그룹 (회장: 박경운)	남북 문화정보화사업	3억5천만원	'98.5.11 ('98.6.20)
우인방커뮤 니케이션	조선해외동 포원호위원회	북한 명산·역사적 명승지 탐방관련 다큐멘터리 및 방송광고 제작	미 정	'98.8.6
▲우인방커뮤 니케이션/ 한국자동차 경주협회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통일염원 금강산 국제렐리	100만불	'99.2.9 ('99.11.11)
▲(주)CNA 코리아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99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양·서울공연	100만불	'99.3.25 ('99.4.16)
MBC 프로덕션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CD 남북공동 제작, 뮤직비디오 제작 등	68만불	'99.5.12
▲연변과기대 후원회→ 동북아교육 문화협력재단('99.6.29)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나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	나진·선봉내 과기대 설립·운영 (나진·선봉)	500만불	'98.1.9 ('98.6.5)
▲(주)하나로 통신	삼천리 총회사	3D 단편 애니메이션 남북공동제작	16만불 → 107,666불	'01.3.23 → ('01.3.23→ '01.12.26 변경)
3D 단편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22만불			('02.7.26)
▲(사)동북아 교육문화협력 재단	교육성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	400억원	'01.6.5 ('01.6.5)

사업자	사 업 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금 액	사업자 승인일 (사업승인일)
▲남북교육문화교류연구소 (동해대학교)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	9만불	'01.6.7 (01.6.7)
▲우인방 커뮤니케이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통일염원 6·15 금강산 랠리	100만불	(01.7.25)
▲(주)지스코	금강산가극단	금강산가극단 한국공연	3천만엔 → 2천만엔	'02.6.25 (02.6.25→ '02.11.29 변경)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재일본조선역사고고학협회 (→문화재보존지도국)	고구려문화전 개최 (* 2004 남북공동기획 고구려문화전)	160만불 (30만불)	'02.7.8 (02.7.8) * 변경승인 '04.4.1)
▲(사)한국청소년사랑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교육국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초청공연	무 상	'02.8.20 (02.8.27)
▲MBC	민화협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장면 등 취재방송, 아시아경기대회 축하를 위한 남북합동공연	120만불 (60만불현물)	'02.9.7 (02.9.7)
▲KBS	민화협	방송물 공동제작 및 생방송	53만불	'02.9.13 (02.9.13)
▲KBS	민화협	남북교향악단 연주회	45만불	(02.9.1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조선그리스도연맹 중앙위원회	조선그리스도연맹 교육관 및 평양신학원 신축	4억5천만원	'03.1.17 (03.1.17)
▲방송위원회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남북 방송교류관련 행사 개최 및 방송설비 설치·사용	13억5천 만원	'03.1.17 (03.9.6)
▲사단법인 평화문제연구소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북한 『조선향토대백과』 편찬·출판	40만불	'03.1.17 (03.5.9)
▲(주)지민필름	(주)만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남북공동가요 제작	6만불	'03.2.14 (03.2.1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앙과학기술 통보사	과학정보자료 교환 및 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 및 활용, 과학기술 이전사업, “향토문화전자대전”발간	11.5만불	'03.3.14 (03.11.5)
▲KBS	민화협	『남북해외학자통일회의』 방송물 공동제작 및 취재, 생방송	10만불	(03.3.19)

사업자	사 업 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금 액	사업자 승인일 (사업승인일)
▲(주)시스젠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	「조선인포뱅크」의 경제·산업정보에 대한 국내 미러사이트 개설 운영	60만불	'00.9.1 (00.9.1)
NS21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남북한합작영화 「아리랑」제작	100만불	'00.10.14
▲(재)시민방송 (→주)알지엔)	조선신보사	영상물 「북한음식순례」 공동제작	1억2천만원	'03.9.4 (03.9.4) * 사업자변경 (04.3.26)
▲민족평화축전 남측조직위원회	민족평화축전 북측조직위원회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개최	220만불	'03.9.16 (03.9.16)
한겨레통일 문화 재단	삼천리총회사	어린이통일연속집 공동제작	미정	'03.11.4
▲대한불교 천태종	개성영통사 복원위원회	개성영통사 복원사업	12억원(현물)	'03.11.4 (03.11.4)
▲(주)영진닷컴	인민대학습당	도서공동번역 및 출판협력	-	'03.11.14 (03.11.14)
▲남북역사학 자협의회남 측협의회	북측역사학자 협의회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기념 남북공동전시회	6억 8천만원	'04.9.3 (04.9.3)
▲(주)에맥출 판사	민화협	고건축 실측조사 및 보고서발간		'04.9.6 (04.9.6)
▲조계종	조선불교도 연맹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85억원(현물)	'04.9.15 (04.9.15)
▲(사)통일맞이	민화협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	110억원	'04.10.25 (04.10.25)
▲MBC	민화협	북녘의 음식 제작	40만불(10만 불은 현물)	'04.1.15 (04.1.15)
▲충북 제천시	금강산국제관 광총회사(북고 성군인민위원회)	과수원 조성사업	8천만원 (현물)	'04.3.24 (04.3.24)
▲동북아시아 문화교류협회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남북공동사진전 「꽃으로 본 내나라」	9천~1억원	'04.6.1 (04.6.1)
▲KBS	민화협	다큐멘터리 「고구려는살아있다」 제작	50만불 (현금 30, 현물 20)	'04.6.5 (04.6.5)
강원도	민화협 (북강원도)	농업·사회문화 협력사업	미정	'04.6.10

사업자	사업 상대자	사업 내용(지역)	금액	사업자 승인일 (사업승인일)
▲(주)민족네트웍	평양정보센터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월 1~2만불	'04.6.24 ('04.7.8)
▲방송위원회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아테네올림픽 북측방송중계 지원	3억원	'04.8.11 ('04.8.11)
▲민족문학작가회의	조선작가동맹	민족작가대회개최	8억7천 5백만원	'04.8.11 ('04.8.11)
(주)아미	범태평양조선 민족경제개발 촉진협회	남북공동애니메이션 제작	미정	'00.11.29
▲한국문화재단	금강산가극단	금강산 가극단 한국방문 공연	1천만엔	'00.11.29 ('00.11.29)
▲(사)춘향문화선양회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춘향전」 남북합동공연	60만불	'01.1.12 ('01.1.1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북한과학원 식물자원연구 중심	남북한 식물공동조사 및 영문판 『한반도종합식물지』 작성	100만유로	'03.4.16 ('04.4.20)
▲대한불교조계종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북한사찰 단청불사 및 관련 부대행사	340백만원	'03.6.5 ('03.6.5)
▲KBS	민화협	전국노래자랑 평양편 공동제작	100만불	('03.7.21)
▲KBS	민화협	방송물 「경협현장을 가다」 제작	50만불	('03.8.26)

주)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경우임.

※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취소사유 발생으로 1건 취소 조치(2001.06.29, 시스젠)

출처: 통일부, 「월간 교류협력동향」, 제160호 (2004.10).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분야별 현황

1.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995년 9월 정부가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을 허용하였으나 대북 지원 창구는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국내 민간단체들은 대한적십자사에 성금을 기탁하여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초기에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정보부족, 국내의 여론형성 부족으로 인해 민간의 대북지원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후 아래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지원 규제완화조치에 따라 1998년 3월 18일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통해 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인도인수시 민간단체 대표 참여 및 대북지원 협의·모니터링 목적의 방북 허용⁵, 민간의 대북지원을 위한 모금활동 규제 완화, 협력사업 방식의 시범적인 대북지원을 허용하였다. 1998년 9월 18일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⁵ 다만 민간단체와 북측 간 협의시 대북 전달은 남북적십자 간 지원구도를 통해 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토록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

발표하였다. 즉 민간단체가 대북협외·물품구입·수송·모니터링을 직접 수행하고, 대한적십자사는 포장(적십자 표시) 및 대북통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⁶ 1999년 2월 10일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에 따라 민간단체들은 독자창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단순히 구호물품의 전달방식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으로 발전되게 된 것이다. 또한 1999년 10월 21일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자 이를 근거로 민간단체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표 III-1> 민간 대북지원 규제완화 조치경과

일 자	주 요 내 용
1995.9.14	○대한적십자사 창구 단일화 방침 발표 - 쌀 지원, 개별기업체·언론사 참여, 대북직접지원, 불특정 다수 대상 모금 제한
1997.3.31	○대북지원 참여범위 및 품목 확대허용 조치 - 기업체의 경제단체를 통한 지원 및 쌀(외국산) 허용
1998.3.18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 대북지원 협의 및 monitoring 목적의 방북 허용 - 협력사업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 언론사/개별기업체의 협찬·후원 및 event성 행사 허용
1998.4.25	○ARS 방식을 이용한 대북지원 모금(사안별) 허용
1998.9.18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 허용 - 민간단체가 대북협외·물품구입·수송·모니터링 직접 수행 - 대한적십자사는 포장(적십자 표시) 및 대북통보 담당
1999.2.10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 - 민간단체 명의 독자적인 대북직접지원 허용
1999.10.27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⁶ 민간단체의 대북 개별지원 최소규모는 지정기탁 최소규모(옥수수 기준 1,000톤)를 기준으로 허용하였다.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대북 인도적 사업에 지원하게 된 것은 민간단체의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나름대로 인정하고, 민간의 대북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북지원단체에 대한 기금지원은 농업복구, 보건의료, 취약계층지원 등 분야별 민간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04년도에도 23개 단체의 25개 사업에 대해 98억 67백만 원의 기금지원이 승인되었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대북지원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협력기금 승인액이 일부 집행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표 III-2> 대북지원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집행내역 (2004.8.31)

(단위: 백만 원)

단체명	사업내용	연도별 집행액					합계
		'00	'01	'02	'03	'04	
한국JTS	어린이 영양식, 농업 개발	412	311	297	265	170	1,455
국제옥수수재단	옥수수 증산, 신품종 개발	862	4	698	710	-	2,274
남북나눔	어린이영양 (국수, 채소)	-	263	361	843	275.5	1,742.4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농업 개발, 병원·제약시설	286	539	1,237	60	651	2,773
유진벨재단	결핵 퇴치	792	1,000	-	1,305	478	3,575
월드비전	종자 개량 (감자, 채소, 과수)	788	434	247	479	149	2,115
한민족복지재단	어린이 급식(빵), 의료 지원	178	127	355	49	80.1	769.1
굿네이버스	젖소·닭목장, 육아원, 의료	61	421	742	1,576	434.7	3,234.7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 영양·의료시설	-	122	372	537	432	1,463
조국평화통일 불교협의회	급식 지원(국수)	-	39	93	79	125	336
천주교서울대교구	급식 지원(국수)	-	132	341	286	173.4	932.4
새마을운동중앙회	농기자재 (손수레, 비닐 등)	-	262	396	130	75	863
남북농발협	씨감자 재배	-	189	161	107	144	601

단체명	사업내용	연도별 집행액					합계
		'00	'01	'02	'03	'04	
평화의 숲	종묘장 설치, 묘목 지원	-	-	-	55	86.2	141.2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취약계층 의료 지원	-	-	-	123	93	216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언어 부화, 산림방제	-	-	-	701	-	701
한국대학생선교회	젓염소 목장	-	-	-	-	301.1	301.1
선한사람들	의약품 지원	-	-	-	116	-	116
국제기아대책기구	수액제 공장, 식수 개발	-	-	-	-	645	645
원불교	급식지원(빵)	-	-	-	90	222	312
한국복지재단	육아원, 의료, 급식(빵)	-	-	-	-	197	197
대한결핵협회	결핵 퇴치	-	-	-	-	-	0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의료기기	-	-	-	-	-	0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아동급식	-	-	167	-	-	167
사업비 소계	24개 단체	3,379	3,843	5,447	7,529	4,731.9	24,929.9
제주도민운동본부	감귤 수송비	-	-	7,035	542	1,381	2,958
농협중앙회	사과, 배 수송비	-	2,419	-	-	-	2,419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닭고기 수송비	-	-	-	-	32	32
수송비 소계	3개 단체	-	2,419	1,035	542	1,143	5,409
합 계		3,379	6,262	6,482	8,071	4,749	28,943

출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2003년 말까지 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총 123억 8,200만 원 중 105억 5,3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5.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 89%, 2002년 89.8%, 2003년 80.8%가 집행되었다. 기금승인액보다 실제 집행률이 떨어지는 원인은, 초기 사업단계부터 각 단체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면밀하게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대략 소요액을 책정한 것도 한 요인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술지원이 수반되는 설비위주의 지원인 경우 단계적으로 방북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남북관계 경색 등 다양

한 요인으로 방북이 여의치 못한 경우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모금의 저하 등으로 승인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3년도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았기 때문이다. 2004년의 경우 7월 이후 방북이 중단되면서, 민간단체들의 협력사업 추진상 차질이 발생하여 승인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지원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사업 심사과정을 보면, 정부의 민간단체사업에 대한 입장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대북지원민간단체 기금사업 심사는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진다. 첫째, 사업분야와 지원내용의 적절성으로 해당사업이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한 것인지와 우선 사업분야(취약계층 보건(8~10), 농업분야 등 기존우수분야(5~8), 기타 신규사업(3~5)) 해당여부, 지원물품 및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한다.⁷

둘째, 사업내용의 효과성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사업계획이 얼마나 충실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사업추진방법의 효과성과 사업자의 전문성을 검토한다.

셋째, 분배투명성 확보수준은 인도인수절차의 이행가능성, 복측 분배결과 확보가능성, 사업현장 방문 및 수혜자 접근 정도, 상주인원 파견여부로 평가한다.

넷째, 수혜대상의 적절성 및 분배대상지역은 평양시지역(3~5), 지방대도시(5~8), 소도시 및 군지역(8~10)을 차별화하여 지원이 지방의 지역단위로 확대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는 정책적 고려사항이라는 항목으로 특정사업의 대북정책 목표달성에의 기여도,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과 규정의 준수, 남북간

⁷ 괄호 안의 수치는 사업 분야별 평가 배정 기준을 의미한다.

왕래 및 지속적 교류협력의 가능성, 북측 상대방의 적정성(비정치·비영리성), 사업효과 방침의 일관성 유지노력을 측정한다. 단체별 지원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외모금 포함 및 10% 가산한 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대북지원실적⁸과 현재 모금된 자체재원, 과거 기금지원사업의 기금재원 집행률이 반영된다.

이와 같이 정부는 대북지원민간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협력기금지원을 통해 민간단체의 지원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화해협력이라는 정부의 대북정책목표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이 남북간 왕래 및 지속적 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정부는 대북지원 품목, 모금방법, 지원창구 문제 등에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민간의 대북지원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으나, 민간 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은 민간 대북지원이 안정적 재원의 뒷받침 위에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북한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의 대북 인도적지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민간차원 대북지원이 실효성 제고와 양적 확대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었다. 기금 지원 규모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금 규모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는 만큼, 민간단체들이 이와 관련된 노력을 강화하였다. 2004년 대한의사협회와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등 2개 단체가 추가 지정되어, 총 33개 단체가 독자창구를 통해 대북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민간 대북지원이 초기의 식량위주 일회성 지원으로부터 농업

⁸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서 기부물품의 비율이 상당하며, 기부물품의 경우 지원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대산정의 문제점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개발, 보건의료 등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지속적 지원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민간차원의 대북직접지원을 통한 남북주민 간 접촉의 확대와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지원자금은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에 지원하고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배투명성 확인을 위한 방북 등 남북 간 인적왕래⁹와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이 확대되었다. 지원물품 모니터링 등을 위해 2004년 5월말까지 442명이 방북하였다. 2002년부터 지원단체의 모니터링을 명목으로 한 대규모 방북단이 직항 전세기를 통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도에는 SARS 관련 북측의 요청으로 4월 20일경부터 6월 20일경까지 2개월 여간 민간단체 방북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방북이 꾸준히 계속되었다.

<표 III-3> 연도별 대북지원민간단체 방북인원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5월)	계
인원 (건)	49 (15)	144 (39)	384 (76)	1,715 (119)	1,320 (111)	476 (81)	2,926 (297)

출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이제까지 대북지원민간단체의 협력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III-4>에서와 같이, 취약계층, 보건의료, 농업개발에서 이루어졌다.

⁹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전체사업비의 최대 5% 범위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조).

<표 III-4> 분야별 대북지원민간단체의 협력사업

사업분야	사업단체	사업내용
취약계층	어린이 등을 위한 급식공장 (국수·빵·두유·영양식)운영, 의류, 기타 생필품 지원	한민족복지재단,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굿네이버스, 남북나눔, 한국JTS, 원불교, 평북협 등
보건의료	안과병원 건립, 제약공장설비 복구, 어린이심장병센터 건립, 병원현대화, 어린이영양센터건립 (의료·급식 병행), 전염병퇴치, 구충, 기초의약품·의료기자재, 정수·식수 개발 등 지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민족복지재단,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굿네이버스, 유진벨, 건강관리협회 등
농업개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국제옥수수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강원도협력협회, 평화의숲 등	농기계수리공장, 젓소·젓염소목장, 닭목장, 산란종계장, 종자개량·보급, 언어자원보호·증식, 산림복구, 해충방제, 온실영농, 비료·비닐 등 각종 농기자재 지원

출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2. 분야별 추진실태

대북지원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주로 지원을 위한 교류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물론 「국제옥수수재단」의 옥수수신품종 개발사업과 같이 일부단체들의 협력사업은 경제협력사업으로 승인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인 지원사업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본 절에서는 2003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지원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취약계층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로 육아원 지원 및 어린이와 노약자에 대한 급식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2003년도에는 남북나눔운동, 한국복지재단, 원불교,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남북나눔운동>

남북나눔운동¹⁰은 북한 어린이의 발육 성장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하고 ‘북한어린이분유보내기’캠페인 등 지금까지 다각도로 실시했던 북한 어린이의 발육과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목표하고 있다.

첫째,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운영하는 평양소재 봉수국수공장을 통하여 연간 밀가루 1,200톤과 분유 80톤을 공급하여 국수와 이유식으로 가공하고 이를 분유와 함께 고아원과 육아원을 중심으로 북한의 유아, 어린이에게 지원하여 왔다.

둘째, 평양근교 두루섬에 소재한 수정재배단지(1,500평)에 필요한 씨앗을 지원하여 연중 재배되는 이유식용 오이(128톤)와 토마토(48톤) 등을 공급하였다. 주요 지원기관은 두루섬유치원, 두루섬탁아소, 김정숙탁아소, 적십자병원, 락랑구역병원, 김만유병원, 적십자병원, 구역병원, 평천구역병원, 평양의학대학병원, 해운유치원, 정백 1탁아소, 정백 2탁아소 등 이다.

셋째, 겨울용 유아·어린이 옷 및 유아·어린이 용품을 동시에 보

¹⁰ <<http://www.sharing.net/>>.

내 연료부족으로 난방이 빈약한 곳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는 어린이들의 체온 유지, 질병을 예방 및 발육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넷째, 4.5% 이상으로 추정되는 결핵환자로 인해 면역이 약한 어린이의 감염이 많아 X-Ray 결핵 검진차량 1대를 지원하였으며, 필요시 기초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삽, 팽이 등 단순한 농기구를 보내 어린이들이 공동생활하고 있는 고아원, 육아원, 탁아소 등에 공급하여 터밭을 효율적으로 가꿀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복지재단>

한국복지재단¹¹은 육아원 어린이들에게 분유, 영양식(밀가루, 대두유, 설탕), 보육용품, 의약품,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여 왔다. 분유 영양식은 아동 1,800명에게 1인당 2kg씩 6개월 분량을 지원하였다.

5개 육아원을 대상으로 설비 보수자재와 방한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빵공장(일일 5,000개 생산) 운영을 통해 어린이 영양증진을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표 III-5>에서와 같이 5개 육아원 어린이(0~4세) 1,800명, 평양시내 애육원·인민학교 어린이 5000명, 평양 제2인민병원(아동병동에 집중)이다.

¹¹ <<http://www.kwf.or.kr>>.

<표 III-5> 복지재단 지원수혜대상 규모 및 지역

수혜대상		수용 아동 수	소재지
5 개 육 아 원	개성육아원	200명	개성직할시
	평성육아원	400명	평안남도 평성시
	희천육아원	400명	자강도 희천시
	강계육아원	400명	자강도 강계시
	함흥육아원	400명	함경남도 함흥시
평양 애육원 및 인민학교		5,000명	평양시
평양 제2인민병원		-	평양시

<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

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는 평양에 설립한 빵공장(2003년 3월 준공)에 매월 40톤의 밀가루를 공급, 매일 4만개의 빵을 생산하여 평양 근교 탁아소, 유치원, 육아원, 소학교 등의 어린이 2만 여명(9·15탁아소 어린이: 11,000명, 평양시 유치원·소학교 어린이: 9,000명)에게 급식, 기타 기저귀, 내의 등 유아용 생활용품을 지원하였다.

동 단체는 북측에서 빵공장 설립과 밀가루 지원의 요청을 받고, 합의를 작성하여 지난 2003년 3월 26일 평양시 만경대구역 장훈3동에 빵공장을 설립하여 준공식을 가졌다. 그리고 빵 생산에 들어가 매일 4만개의 빵을 생산하여 평양 근교의 9·15탁아소를 비롯한 소학교, 유치원, 탁아소, 육아원(1~4세) 어린이들에게 빵 공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과 2002년 12월 10일에 체결한 빵공장 설립 합의서에 따라 3년간 빵 제조에 필요한 밀가루, 식용유 등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2005년 12월 9일에 1차 사업완료와 함께 다시 합의하기로 하였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¹²는 사리원 소재 금강산국수공장에 연간 600톤의 밀가루와 생필품을 지원하여, 1일 7,700그릇(2톤 분량)의 국수를 생산하여 인근 유아원, 노약자 등에 급식을 제공하였다. 지속적인 급식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북측은 2003년 조선불교도연맹산하에 2년 과정의 스님양성소를 운영한다면서 승복, 목탁, 범회집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보건의료

<어린이의약품지원운동본부>

어린이의약품지원운동본부¹³의 북한 어린이 응급질환 긴급구호를 위한 의약품 지원사업은 임신부 및 산모를 위한 의약품 및 영양지원과 자체적으로 북한어린이 건강 실태에 대한 연구 조사를 추진하여 왔다. 동단체는 소아병원, 유치원, 탁아소 등에 의약품을 지원함으로써 통일 의 새 세대인 북한어린이를 살리고 남북의료인의 교류협력을 도모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임신부의 영양상태¹⁴는 임신부 본인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산모의 영양장애는 신생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산모에 대한 의약품 및 영양지원 역시 필수적이다.

¹² <<http://www.bubtanet.or.kr>>.

¹³ <<http://www.healthchild.org>>.

¹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2003년도 북한어린이 건강실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모성사망률이 지난 1990년 출생아 10만 명당 70명에서 1996년 110명으로 급증했으며, 2002년도에는 87명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남한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세 미만 아이를 가진 여성중 45kg 이하 체중을 가진 비율은 16.7%를 차지했고, 32%가 영양장애 상태였다.

동단체는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북한어린이 건강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대북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하였으며, 대북 보건의료지원의 주요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연구작업은 보건의료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보건의료분야의 대북지원만을 보면 단순한 의약품의 지원에서 나아가 의약품 생산설비와 원료의약품,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단, 치료 장비들이 지원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치료를 받을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없이는 지원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을 정도로 지원단체들의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및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 단체는 철분제와 종합영양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원료의약품을 지원하였으나 방북 지연으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남북어린이어깨동무¹⁵의 어린이 영양증진 및 의료사업은 연 100만 명분의 구충제와 연 7만 명분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를 위한 영양제 등 의약품 지원과 평양 동대원 구역에 1,300평(30병상 입원실, 진료실) 규모의 어린이 영양증진센터를 건립하는 것이었다. 어린이 영양증진센터는 설사환자 중증(입원) 연간 1천 명, 경중(외래) 연간 3만~5만 명 등 연 13만~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치과진료도 연간 15,000명을 예상하고 건립되었다. 또한 센터 내에 영양증

¹⁵ <<http://www.okedongmu.or.kr>>.

진을 위해 콩 우유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의과학원 산하 어린이 영양관리 연구소에서 전국에 영양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상당한 수준의 기초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어린이 영양증진센터의 건립은 낙후된 보건의료체계를 복구하고, 어린이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한 자료축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아대책기구>

국제기아대책기구¹⁶는 평양 정성제약연구소 내에 연간 500cc 500만 병 생산규모의 링거액, 포도당액 등 수액제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기초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민족 서로돕기와 공동으로 추진되었다. 정성제약 수액제공장 지원은 기초 의약품 생산복구 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었다. 남측 기술진의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함께 북측 기술인력이 제3국(중국)으로 나와 관련시설 견학 등을 실시한 것은 새로운 기술협력으로 평가된다.

<유진벨재단>

유진벨재단¹⁷은 평안남북도, 평양, 개성, 남포 등 지역의 결핵기관, 인민병원 50여 곳을 대상으로 결핵퇴치사업을 지원하였다. 결핵퇴치

¹⁶ <<http://www.kfhi.or.kr>>.

¹⁷ <<http://www.eugenebell.org>>.

를 위한 도프치료법(직접관찰 치료방식)을 북한에 도입하여 결핵약, 결핵진단키트, 일반의약품을 지원하였고, 환자들의 영양증진을 위해 농업자립을 위한 농자재 지원도 병행하였다. 북한당국이 접근을 일정 지역으로 제한하면서 북한전지역 대상에서 사업지역을 서부지역 등으로 축소하게 되었다.

유진벨재단은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결핵퇴치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지원 대상을 기초의료기관인 시군단위 인민병원까지 확대하고 검진차량을 이용하여 협동농장 작업장 의무검진도 실시하였다. 내성환자수가 기관마다 5%이상 증가하고 있어 실험실 및 내성환자용 치료약품 투입 등 내성환자 치료대책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유진벨은 남포시에서 전체주민을 대상을 결핵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결핵 없는 시로 만들고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자 계획하여 왔다.

<선한사람들>

선한사람들¹⁸은 북한주민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결핵약품, 항생제, 구충제, 해열진통제, 영양제 등 의약품 및 X-ray 검진차 등 결핵 검사장비를 지원하여 왔다. 선한사람들은 한(1)사람이 한(1)사람의 생명을 구(9)하자는 사랑의 119운동을 통해 북한지원의 긴급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식량난 및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북한주민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향후 선교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선한사람들은 북한당국이 선한사람들의 탈북자 지원 등 국내활동

¹⁸ <<http://www.goodpeople.or.kr/>>.

을 이유로 모니터링 방북을 거부하였으나, 북측의 불합리한 행동에 항의하고 향후 사업지속 여부를 북한의 태도 변화와 연계시킨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 농업 개발

<평화의 숲>

평화의 숲¹⁹은 양묘장 조성사업을 통해 평양근교(150만 본 생산규모), 고성(100만 본 생산규모)에 양묘장을 조성하여 산림복구를 위한 묘목생산을 지원하였다. 산림분야 지원 교류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산림시찰 및 산림분야협력방안 회의 및 아까시나무에 관한 남북 전문가 학술토론회 등 남북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왔다. 평화의 숲은 초기 시범양묘를 시작하였으나 안정화단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북농발협>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²⁰는 씨감자 생산용 조직배양 시설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여 왔다. 한반도의 식량자립이 매우 절박한 문제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남북농발협은 강원도 원산에 3,000만 알 생산규모의 씨감자 배양시설을 설치하여 북한 동부지역에 씨감자 원종을 생산공급하여 왔다. 동 단체는 조직배양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감자종자개량 기술 확보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¹⁹ <<http://www.peaceforest.or.kr/>>.

²⁰ <<http://www.potato.or.kr/festival2/kadeco.htm>>.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²¹의 축산개발을 통한 어린이 영양지원사업은 1999년부터 연속사업이며, 2000년부터 협력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지원사업은 평양(중화군 교잡소젖소목장, 강동군 구빈리 협동농장), 남포(대안젖소목장, 용강젖소목장)의 4개 젖소목장(530마리)에 우유 생산기자재, 사료 및 낙농기술 지원을 통해 생산우유를 인근 어린이 9,240명(연 2,310,000명)에게 급식을 제공하였다. 또한 평양 삼석닭 공장(원종장), 서포닭공장(산란), 용성닭공장(육계)에 종란, 부화시설, 생산기자재를 지원하여 연간 1,413,720개의 계란과 494,140마리의 닭고기를 생산하여 인근 어린이 등에게 급식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굿네이버스는 축산분야의 낙농, 양계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영양결핍상태에 놓여있는 북한 어린이들 9,240명(연 2,310,000명)의 영양실태를 개선하여 건강한 발육에 기여하며, 남한의 선진축산기술을 전하여 북한의 낙후된 축산업 발달을 도모하고자 목표하였다.

굿네이버스는 축산지원사업이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젖소와 함께 지원한 유제품 생산 설비를 통해 북한 축산(낙농)분야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우유뿐만 아니라 치즈, 요구르트 등 다양한 유제품을 통해 관련 농가 소득을 높이고 어린이들의 영양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양계부분 중에서도 원종금장 지원을 통해 북한 양계부분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양계사업은 고단백식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들의 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이다.

굿네이버스는 2003년 대규모 직항 방북을 실시한 이래 많은 후원

²¹ <<http://www.goodneighbors.org/>>.

자들이 지원물품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방북을 추진하여 왔다. 굿네이버스는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고 있는 남북화해협력사업에 대한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북한 사람들도 남한의 대규모 대표단 방문을 보며 남북한의 변화된 위상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²²의 농기계수리공장사업은 평남 대동군에 농기계수리공장(250평)을 설치·운영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콤팩트, 경운기, 이앙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여 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농기계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남북농업협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다. 또한 사업을 2003년도에는 전라남도과 평안남도 간 협력사업형식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함으로써 남북지역간 교류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에는 경기도-황해북도, 전라북도- 황해남도 간 농기계수리공장 협력사업으로 확대하였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²³의 산란 종계장 운영 및 농자재 지원사업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손수레, 비닐하우스, 경운기 등 농기자재를 지원하고 산란종계장(5동 557평)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

²² <<http://www.ksm.or.kr/>>.

²³ <<http://www.saemaul.or.kr/>>.

되었다.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전문화된 농업지원분야 지원활동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목표하였다. 자체적으로는 대북 지원 필요성 관련 내부설득 및 회원 간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월드비전>

월드비전²⁴은 식량증산을 위한 종자개량사업(감자, 채소, 과수)을 추진하여 왔다. 평양, 양강도 대홍단군, 평북 정주, 황남 배천, 함남 함흥 등 5개 지역에 씨감자(원종) 생산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 생산목표량을 대홍단 60만 알, 평양 500만 알, 정주 166만 알, 배천 166만 알, 함흥 166만 알 등 총 1,058만 알로 설정하였다. 또한 평양 만경대구역(1,000평), 두루섬지역(1,500평)의 채소온실을 운영·지원하여 왔다.

월드비전은 북한이 식량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강조해온 감자증산노력과 맞물려 우수종 씨감자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정보당 6~7톤을 생산하였으나, 개량 씨감자를 파종할 경우 20(월드비전 평가)~40톤(북한 농업과학원평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 농업과학원은 2003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감자심포지움에서 월드비전 사업장을 소개하고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학생 선교회>

대학생 선교회는 축산개발지원사업(젓염소 보내기)을 추진하면서,

²⁴ <<http://www.worldvision.or.kr/>>.

젖염소 종축 개발을 위해 우수종 염소(130두)와 종축 개량기술을 지원하고, 착유치즈가공설비, 동물약품, 사료 등을 공급하여 왔다. 사업 대상지역은 황해북도 봉산군 은정리 염소원종목장으로 식량난에 빠져 있는 북한의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인 산양유(젖염소우유)를 공급하기 위한 일환으로 젖염소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대학생선교회는 향후 10년간 190만 7천 호 북한농가마다 젖염소 한마리 이상씩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젖염소는 사료초지 등 사육조건이 불리한 북한지역에 적합한 가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북한의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품목, 궁극적으로는 젖소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나 사료문제 등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 단체는 젖염소 지원사업은 “살아있는 가축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와 관리요원과 수의사의 역할이 크다. 유용종(乳用種)의 가축특성상 세심한 사양관리와 주기적인 젖 짜기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낙농기술의 전수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질병관리와 출산관리가 요망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목장의 축사개량을 위한 전반적인 시도를 해야 하며, 이것을 통해서 염소의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예방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 대학생선교회는 생산된 우유제품과 치즈로 담당농가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구소득 증대사업으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제옥수수재단>

국제옥수수재단²⁵의 옥수수 증산사업은 북한의 전체 협동농장의 50%인 1,500여개 협동농장에 옥수수 종자(수원 19호)와 농자재를 지원하여 단기적인 옥수수 증산을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측 25개 시험연구소와 공동으로 신품종 옥수수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본 협력사업은 지속적인 옥수수 증산지원사업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신품종 옥수수 개발사업은 북측이 사업현장 방문을 거부함으로써 상당한 차질을 빚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²⁵ <<http://www.icf.or.kr/>>.

민간단체의 지원사업 평가

1. 일반사회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평가

1990년대 초반부터 일반사회단체들의 남북 간 교류가 시작된 이래 남북한 왕래행사 및 제3국 행사가 꾸준히 전개되었으며,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추진에 따라 1998년부터 더욱 활성화되었다. 우리 사회단체들은 교육, 문화, 체육, 종교, 청소년, 언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일반사회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사회단체들은 역사, 한국학, 경제, 통일안보, 과학기술, 언어, 대학 간 학술교류, 여성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류를 쌍방향으로 시도하였다. 초기에는 방북행사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후에는 3·1절 기념행사 및 6·15 남북공동선언기념 6·15행사, 8·15행사 등 대규모 행사를 성사시켜왔다. 체육분야의 경우에도 1991년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1999년에 현대아산이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설하는 한편, 통일농구경기대회를 서울과 평양에서 상호 개최

함으로써 다시 활성화 되었다. 2002년에는 남북한을 오가며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류가 이루어졌다. 유럽-코리아재단 박근혜 이사 방북 시(2002.5.11~14)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데 따라 『2002 남북 통일축구경기대회』가 서울에서 개최(9.5~8)되었다. 2003년 부산아시안게임과 2004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이 응원단을 파견하였고, 2003년 제주평화체전에도 북한이 소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사회단체의 대규모 행사추진에는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해 재정규모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행사에는 재정지원이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사회단체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공동행사를 통한 대화 시 의제 진전이 없다는 점에서 행사의 지속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남북공동행사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우리측 예술단의 방북공연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북한예술단의 방남공연, 공동문화행사로 발전되었다. 1998년 리틀엔젤스예술단 평양공연, 평양의 윤이상 음악회 참가, 1999년의 평화친선음악회 방북공연, 민족통일음악회 방북공연에 이어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평양교예단,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등 대규모 남한공연이 이루어졌다. 2001년에는 춘향전 남북합동공연, 민족옷전시회, 남북공동사진전, 남북공동애니메이션 제작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공연재원은 남측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가 되었다.

셋째, 일반사회단체의 남북교류는 남북한 화해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미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는 자원동원능력이 있는 언론사들의 역할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전된 남북관계 상황을 바탕으로 각종 방북행사를 취재하거나,

개별 방송사 차원의 북한현지 촬영 및 방송물 제작·방송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97년 중앙일보사 통일문화연구소가 북한지역 문화유적 답사·조사 사업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 경향신문사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는 1998년 「남북통합문화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사업」과 2000년 「북한문화예술자료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다. 2001년에 『연합뉴스』는 2002년 말 북한 조총련계 통신사를 통해 『조선중앙통신사』 기사자료를 제공받아 국내 언론에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관영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2년에 열린 북한에서 만든 고구려 고분의 모사벽화와 진품유물들로 이루어진 고구려유물전시회(2002.12.6~2003.3.5)는 공통된 역사와 민족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고, 남북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넷째, 종교분야에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선교차원의 관심과 대북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관심을 바탕으로 기독교, 불교, 민족종교 등 각 종단·교단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교류협력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2002년 기독교계는 각 교단대표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관계자, 재일대한기독교회 관계자가 참석하여 제8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 동경회의(7.22~7.25)를 개최하고, 각 교단별 남북교회 교류협력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는 2001년 평양신학원 관련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1997년 이래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부활절 남북공동기도문을 매년 합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제단 주관하에 2000년부터 조선 카톨릭교협의회와 중국 따렌에서 안중근의사 순국 기념 남북공동학술세미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조선

불교도연맹측과 함께 1997년 이래 해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을 채택하여 남북공동법회를 개최해 왔다. 2002년 4월에는 묘향산 보현사에서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와 남북불교도 공동법회를 개최하였으며, 불교계는 북한사찰 59개소의 단청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다섯째, 일반사회단체의 남북교류행사는 주로 북한이 정치적으로 선호하는 특정 사회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예를 들어 우리사회에서 이른바 진보성향을 가진 노동자, 농민, 여성, 대학생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교류행사가 이루어져 왔다. 2002년 8·15 남북공동행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북측 민간 인사들이 서울을 방문하여 합동문화공연, 미술·사진전시회, 부문별 상봉모임, 학술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2002년 10월에는 남북청년학생공동행사 및 남북여성공동행사가 금강산에서, 개천절 남북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여섯째, 일반사회단체의 사회문화교류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협력사업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나,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분야에서는 학교건립사업 및 제도화된 교류협정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은 2001년부터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2001.6.5)받아 추진하고 있다.²⁶ 한양대학교도 북한 김책공대와 2001년 5월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백남공학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 2002년도에는 북한의 관심에 따라 대북 IT교육이 실시되었다. 한양대는 8주간(7.1~8.23) 김책공대·김일성대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IT교육을 성공리에 실시하

²⁶ 최근에는 북민협에 참여하여 대북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자체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한양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이외에 Global Knowledge Korea, 통일미래연구원, 재외동포연구원 등도 대북 IT교육 사업에 대해 북한과 협의를 추진하여 왔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남북관계 확대와 함께 대북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게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업무를 사전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사업은 정부의 통일정책 틀 속에서 비정치적이고 교류가 용이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교류사업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사업은 일반사회단체와 달리 행정자치부의 「남북자치단체간 교류협력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교류협력 계획 수립 및 보고, 지자체 교류협력사업 협의 및 조정, 통일부 승인 신청, 북한지자체와의 접촉 협의, 교류협력사업 결과 보고 등의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2000년 6월 정상회담 이후 지자체들의 대북사업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으며, 다수의 사업들이 지자체교류협력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부산시의 전국체전 금강산 성화채화, 강원도의 금강-설악권 솔잎혹파리 공동예방사업과 남북공동 어린 연어 방류사업, 남원시의 춘향전 방북공연, 제주시의 직항로를 통한 감귤 및 당근보내기, 옥천시가 「평화의 숲」과 공동으로 추진한 묘목보내기 사업 등이 이루어졌다.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무산된 사업들 중에는 북한 인사들의 초청과 관련된 사업들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사업의 특성을 보면, 교류희망대상인 북측 지자체와 직접사업 협의는 거의 불가능하며, 양측 중개자를 통해 협의를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 및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남

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여 왔으나, 상당수의 지자체는 적절한 사업예산 확보나 사전연구 없이도 경쟁적으로 대북교류사업에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지자체의 장이 대북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정치적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대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²⁷ 지자체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북측은 남측 지자체의 방북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면서,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여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2. 민간단체들의 해외원조활동 평가

한국국제협력단이 발간한 1997년 『지구촌의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민간단체들의 해외원조활동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해외원조단체들은 대북지원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²⁸ 자료는 해외원조활동의 모범사례를 소개한 백서 형식으로, 단체소개, 사업대상국가 및 지역, 사업기간, 사업목적 및 추진경위, 세부활동사안, 현지인들의 반응, 사업결과에 대한 기대효과를 담고 있다.

사업목적 및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첫째, 해외원조사업답게 지역봉사를 통한 인도주의 실천뿐만 아니라 국제친선 혹은 국위선양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봉사단의 활동은 병원건립과 현지

²⁷ 김학성, “남북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남북교류협력 정책토론회 (2003.3.31), pp. 19-46.

²⁸ 2003년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가 발행한 『2003년 민간단체 해외원조 활동자료집』에 따르면, 굿네이버스, 선한사람들, 지구촌나눔운동,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제이티에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민족복지재단 등이 해외원조사업과 대북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진료를 통해 인술을 구현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미회(간질 환자회)는 네팔에서 의료봉사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 병원건립과 의료봉사단활동, 의료인 국내 기술(기자재 작동) 연수를 실시하였다. 경희국제의료협력회는 네팔남부지역 의료봉사를 통해 인술구현을 하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단체의 주요한 사업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즉 친선병원을 개원하여 진료봉사팀과 상주국제협력의사를 파견하였다. 정해복지와 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는 베트남 내 한인2세들을 대상으로 원조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어린이육영회는 중국 연변유아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조선족 동포자녀의 교육환경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신림가나안장학회는 필리핀가나안농군학교 건립의 한 목적을 민간외교를 통한 양국간 관계증진으로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도지나국가에서 불우아동 및 언청이수술 지원을 실시한 한국복지재단은 아동복지기여와 함께 한국위상 제고를 사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둘째, 해외원조단체들의 사업을 보면 단순한 물자지원방식보다는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²⁹ 즉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진료와 함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활의식을 배양하는 한편 실질적인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총체적인 지역개발방안을 돕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개발협회는 방글라데시 짚마리지역 농촌개발사업을 위해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 및 훈련법을 활용하여 지도자를 양성하고, 시범농장사업(양계장, 양어장, 농장)을 도입하여 지역개발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²⁹ 신림가나안장학회의 경우 필리핀가나안농군학교를 건립하여 정신교육, 농업교육, 지역사회개발(자립을 위한 기술교육, 컴퓨터와 봉제기술, 유치원 운영, 문맹퇴치 사랑방운동, 의료사업)을 지원하였다.

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역량제고를 위해 훈련받은 청년 지도자들과 농민들을 중심으로 주소득 사업과 신용협동조합을 통한 소득증대, 환경위생, 교육, 문화사업, 양계사업관련 물자 지원, 질병관리, 생산물 공동판매, 초등학교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적은 투자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사업들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동 단체는 예방에 역점을 둔 의료사업, 의료시설이 없는 소외지역 우선,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지역주민의 참여와 환자진료를 통해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접근(교육, 지역개발, 소득증대)하였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해 보건사업, 식수 및 환경위생사업, 계몽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신용협동교육을 통해 자활사업을 지원하였다.

셋째, 해외원조사업은 수원대상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교육 및 훈련을 중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미회는 병원사업에서 교육사업으로 확대하여 국립직업기술훈련센터 중고등, 기술전문과정을 도입하였다. 정해복지와 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는 베트남에서 한인2세와 전쟁고아를 위한 베트남정해기술학교와 한·베트남 직업훈련원을 각각 설립하고, 전문직종의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제정의연구소는 베트남 하따이 개발사업을 위해 직업훈련학교를 설립 운영하였다. 하따이 인민위원회가 기술보급과 고용증대, 농촌지도의 하따이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기대를 걸고 직업훈련학교 건축을 위해 부지를 제공하고, 거주세대에 대한 이전비 및 이전보상비를 부담하였다. 이에 경제정의연구소는 기존 직업훈련학교가 학교건축 혹은 기술훈련만으로 끝나는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목공기술의 기초부터 기계조작, 생산·판매까지 교육, 생산제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최종단계까지 지원하였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한·중기생충관리사업을 통해 기생충퇴치사업에 필요한

기술이전과 기반조성, 기생충감염실태조사, 기술인력 연수, 우리의 경험과 기술전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술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기생충관리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을 지원하였다.

넷째, 해외원조사업 중에는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와 같이 수혜자들의 참여를 통해 자립을 끌어내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다.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는 광범위한 자원봉사동원운동을 통해 빈민층사랑의 집짓기사업, 주택건축사업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 국제적 나눔운동이다. 또한 자립운동 수혜가정이 주택원가를 7~15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한편, 실제 건축과정에 전가족 도합 300~400시간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수혜가정의 자긍심 고양, 자립정신 함양, 계층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섯째, 해외원조사업 분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의 식수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졌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한국선명회는 각각 이디오피아 농촌지역 식수공급사업과 케냐 와지르 지역 구호사업, 식수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농업개발을 추진하였다.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평가

1. 평가의 틀

대북지원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해외원조사업 및 개발지원사업에서 사용되는 평가의 틀을 원용하고자 한다. 총체적인 사업의 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 여건, 사업의 진행과정(계획, 실행, 평가), 사업의 효과 분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³⁰ 본 논문에서는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실제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하였다. 민간단체들의 지원여건, 즉 상근직원의 수, 단체의 자격, 분야별 전문 인력의 수, 물적 자원 등 대북지원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의미한다. 또한 사업의 효과 및 결과 분석은 실제 사업이 미친 영향력³¹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총체적인 과정을 재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일 것이나, 단체들의 사업추진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

³⁰ 최세문,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사업의 평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³¹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사회적 영향력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3).

해 보고자 한다.

사업 추진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과정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원조사업 평가기준 지표인 5개 항목, 즉 사업의 적합성(relevance),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영향력(impact)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제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good practices)도 반영될 것이다.³²

본 연구의 진행은 위의 평가틀을 대북지원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2000년도부터 지급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상 지원을 받은 사업들의 집행과정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방법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민간남북교류협력연구회의 워크샵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관련단체들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위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관련 연구논문들과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사업실무자들에 대한 자문회의를 활용하였다.

2. 사업계획 수립

민간단체의 대북사업계획 수립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단체들이 특정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해외원조사업과는 다른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업대상지역인 북한사회 여건상 사업대상지역

³² OECD, DAC Guidelines and References Series: Harmoniz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Paris: OECD, 2003).

에 대한 기초환경조사 및 사업대상의 소요조사(Need Assessment)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물론 지원이 장기화되면서 북한과의 신뢰 형성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일부단체들은 사업구상단계에서 북한당국들과의 논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정사업 계획의 수립은 사업의 목표설정, 사업대상지역 및 수혜대상 설정, 단계별 사업집행방법 및 감독(monitoring)방법 설정, 사업평가방법 및 지표설정, 소요예산 및 감사방법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김진숙의 대북지원민간단체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북 지원 단체의 실무자들은 또 ‘대북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가장 큰 점을 ‘지원사업 현장에 대한 사전 접근의 어려움’(33.3%)과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료, 통계의 부족’(24.5%)을 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들고 있는 어려움은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북측 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26.5%), ‘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 전망 부재’(25.5%)가 꼽혔다.³³

가. 사업 선정

대부분 민간단체의 대북사업은 북한 당국의 요청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단체차원의 자원동원가능성 등 집행능력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양측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원 초기에는 북한당국이 정책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자원확보의 한 방안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사업이 이루어졌다. 즉 옥수수 품종개발

³³ 김진숙,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고찰: 대북보건의료단체의 사업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 심사용 제출논문 (2004.10).

및 씨감자사업, 젓 염소 및 양계장 등 농축산사업, 제약공장 및 병원현 대화사업 등 북한당국이 주요 분야로 설정한 분야에 대해서 주로 지원 요청이 이루어져 왔다. 유진벨재단의 경우에는 1997년 북한 큰물피해 대책위원회와 보건성의 요청에 따라 결핵퇴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이 협력사업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³⁴ 즉 대북지원사업을 통해 남측 민간단체와 북한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자신들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을 본격화하게 된 것은 6·15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과 민간단체 간의 합의서 작성시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어깨동무 어린이영양증진센터의 설립과정에서도 아래와 같이 북한의 요청에 의한 사업선정 이후 협의과정에서 사업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소 측에서 먼저 장기간의 기근으로 인해 북녘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영양결핍으로 인한 질병의 진료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오고, 이에 남북어린이 어깨동무가 일반구호 차원이 아닌 설사 등 어린이 영양관련 질병의 치료와 연구를 위한 시설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덧붙여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중략)…진료과목은 당시 여건을 고려해 ‘설사치료’만을 전문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가 이후에 ‘치과진료’를 추가했다.³⁵

³⁴ 이일하, “교육복지분야의 남북협력사업,” 통일연구원,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통일연구원·서울대 통일포럼 공동학술회의 (2004.6.17).

³⁵ 박진원(남북어린이어깨동무)과의 인터뷰, 최세문,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사업의 평가,” p. 37에서 재인용.

북한 측의 지원요청과 함께 사업선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남측에서의 자원동원 능력인 것으로 보인다. 즉 민간단체의 특정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후원자로 참여할 기관의 관심 분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평양안과병원 건립사업은 국제라이온스 클럽이 추진하고 있는 시력우선사업(Sight First)과 연계되어 라이온스 클럽이 후원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방북에 참여한 후원자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사업선정 분야가 확정되기도 한다.

사업계획 선정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직접적인 수원기관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사업선정과정에서 단체들이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대북협력사업에 관한 협의는 주로 개별단체의 대표 및 실무자선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논의단계에서 사업의 내용과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할 기회를 놓치기 쉬우며 체계적인 사업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복합적으로 기인한다.

첫째, 지원사업의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요조사에 대한 요구가 거의 이루어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국내 민간단체들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당국의 통제를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하는 한편 대북지원활동을 전개하면서 북한당국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점차 개선시켜 나간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민간단체들은 관련 소요조사뿐만 아니라, 관련 북한당국의 기존 통계조사의 공개도 요구하지 못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이제까지 북한 내의 지원요건상 민간단체차원의 체계적인 사전조사는 매

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민간단체들의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북한이 처한 어려움이 사전조사 없이도 충분히 감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조사를 요구함으로써 파생될 지원상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민간단체들이 사전조사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받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주로 단체들이 국제기구가 공개하는 통계 및 상황보고서를 참고하여서 사업에 관한 사전정보를 수집하여 왔다. 일부단체는 북한지역에 대해 직접조사가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접경지역의 북한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기생충검사를 한 유병률을 근거로, 구충제 사업을 실시했다.

둘째, 이제까지 민간단체들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연합회, 종교단체 등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일부단체들은 초기에 해외지부를 통해 해외동포원회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03년부터 북한의 지원담당기관들이 일부 재조정된 것으로 평가되며, 지원사업을 협의하는 새로운 조직들이 생겨난 것으로 알려진다.³⁶ 또한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사업을 경제협력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의도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북지원민간단체들의 사업상대가 민경련 산하기구들로 전환된 것은 북한당국이 장기간 일방적인 인도적 지원을 받는 것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제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 대규모의 사업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단체들의 지원창구가 실질적인 주무부처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관례와는 달

³⁶ 이는 민간단체간의 협력사업의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코스타와 같은 새로운 조직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최근의 변화이다.

리 북한의 경우 의무성 혹은 민화협과 같은 기관들로 조정부서에서 이루어진다. 실제 남측 민간단체들과의 협상기관들이 협력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며 직접적인 수원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결정에 대한 영향은 매우 크다. 이로 인해 이들 기관들은 북한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의 수요를 파악해 내기보다는, 국가정책차원에서 결정된 중점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자원 동원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북측 협상기관들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감이나 실제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적인 방안 논의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협력사업 협의과정에서 북측의 중개자와 수원기관 간의 요구가 차이가 있다. 즉 북측의 협상대리 기관들은 고가의 의료장비나(CT, MRI 등) 병원 건립, 제약공장지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요구하는 한편, 사업현장의 수원기관 중간관리자들은 실질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북한 내부기관들 간의 경쟁과 남측 지원기관들 내부의 관심과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업이 결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내 민간단체들도 북한의 분야별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접근방법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단체들의 협력사업을 후원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관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초기지원을 통해 상호신뢰를 형성한 유진벨재단은 북한 「큰물 피해대책위원회(FDRC)」에서 관장해오던 유진벨 대북지원사업 중 일반의료사업을 제외한 결핵관련 대부분의 사업을 2001년부터 「보건성(MOPH)」 소관으로 이전시키라는 통보를 받았다.³⁷

셋째,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전문성 부족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³⁷ 『2001년 유진벨 상반기 보고서』
<http://www.eugenebell.org/kor/report/report.htm>.

평가된다. 남측 민간지원단체차원에서 지원에 대한 열의는 매우 강하나, 실제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로 초기 대북지원이 모금된 현금이나 물품을 전달하는 긴급구호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단체들이 해외원조경험들을 제대로 축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이 긴급구호물품전달 단계를 넘어서 개발구호로 전환되면서, 북측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전문성 부족은 대부분의 단체들이 현재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즉 단순구호에서 체계적 개발협력 차원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확보되어야 할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평양정성제약공장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초기에 녹십자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보다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지원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였다. 또한 이 제약공장의 설비와 물자를 국제적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규격³⁸에 적합한 수준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GMP 규정은 약품이나 식품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장의 정수, 전기, 하수도, 냉방시설, 방역 등 건물설비에서부터 실험실의 운영, 포장 및 배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원을 요청하는 북측당국이나 우리 민간지원단체의 경우에도 실제적인 GMP 규정요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 실행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지원단체별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

³⁸ <<http://www.cgmp.com/drug.htm>>.

으나, 이러한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단체실무자들이 전문분야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려는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으나³⁹, 이러한 과정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지원에 대한 남북 양측의 시각차가 매우 심각하게 작용하였다. 즉 서로의 이해 부족으로 양측 모두 나름대로의 계산과 사고 틀에서 서로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민간단체들의 경우에도 후원자 모집이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 같이 후원모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 및 활동으로 북측이 부담을 표시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나. 사업목표 수립

다수의 대북지원민간단체들은 상당수가 북한의 식량난을 계기로 인도적 지원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우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목적을 일반적인 인도적 차원에서의 북한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인도적 지원 원칙에 따라 지원을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포애를 강조하면서 남북한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설정하여 왔다. 또한 다수의 대북지원 단체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종교적 사랑의 실천과 이를 통한 향후 북한선교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목표를 두고 있다.

³⁹ “어린이병원의 향후 지원 계획은 내원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과 치료법을 모니터링하여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기로 북측과 협의하였다. 개원식 전에도 2차례에 걸쳐 남북의료영양 전문가회의를 가졌는데 이 회의에서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파악, 치료방식, 진료체계의 흐름 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기범사무총장과와의 인터뷰 (2004), 김진숙,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고찰”에서 재인용.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사업의 목표는 대부분 단체의 활동 목적과 연계되어 설정되어 있다. 민간단체들의 특정 대북사업의 목표를 보면, 다수의 경우가 북한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분야별로 남북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⁴⁰ 우리민족서로돕기의 농기계수립공장 건립사업의 목표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술협력의 계기 마련 및 농업방식의 변화 유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첫째, 국산 농기계 지원을 통해 농번기에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수확물의 손실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남측 농기계의 우수성과 효율성을 인식시키고 중장기적인 남북간 농기계협력사업의 계기를 조성한다.

둘째, 3년 전부터 시작한 남측 벼농사 농법(소식 이앙법)을 적용한 시범농장을 황해북도로 확대·운영하여 생산성 증대 효과를 실험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고수해 온 재래농법에 변화를 유도한다.

셋째, 평양과 평안남도 대동군에 이어 황해남도 신천군에 ‘농기계 수리공장’을 건설하여 지원한 국산농기계의 수리, 보수를 현지에서 진행하고 또한 고장난 북측 농기계도 함께 수리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넷째, 특히 황해남도를 대상으로 한 농업지원사업을 남측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남북 지역간 교류협력사업의 획기적 전기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다섯째, 북한이 개발하지 못한 종합수확기(콤바인)의 제조기술 이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민족형 농기계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⁴¹

⁴⁰ 굿네이버스는 “육아원: 북한 아동들에게 필요한 분유, 밀가루 등 영양식 및 건강보조품을 제공하여 유아 사망률을 낮추고 영양결핍을 개선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육용품, 교육용품, 시설보수설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학교: 북한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기자재를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남과 북의 교육교류 활성화에 기여”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소아병원, 유치원, 탁아소에 의약품을 지원함으로써 통일의 새 세대인 북한어린이를 살리고 남북의료인의 교류협력을 도모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업평가보고서관련 제출자료 (2004.10).

⁴¹ 우리민족서로돕기, “2004년 사업평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업평가보고서 관련

그러나 아직도 국내 민간단체들의 사업목표는 매우 총론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사업 실행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전문분야별 목표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유엔 및 국제기구들의 지원사업의 경우 수혜자의 역량형성(capacity building)과 성별불평등 문제의 개선(gender-mainstreaming)⁴² 등이 매우 중요한 사업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민간단체들의 사업목표 설정에는 이러한 관점들이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남북관계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여,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조성, 나아가서는 통일을 염두에 둔 접근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 개발협력사업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또한 지원 관련 인도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조사결과가 없기 때문에, 특정사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사업지역 및 수혜대상자의 선정

민간단체의 사업선정과정에 있어 북한사회에 대한 외부의 접근을 최대한 막고자하는 북한당국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북한이 외부의 지원을 나름대로의 방식에 따라 관리하면서, 평양과 같은 주요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다. 민간단체들이 사업대상지역을 지방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남포, 개성, 황해북도 사리원시, 청진지역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결핵퇴치사업을 담당해온 유진벨재단의 경우에는 전국단위의

자료 (2004.10).

⁴² UNOCHA, *Gender Policies of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Organisations Work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3.12.9).

사업에서 북한의 요청에 따라 사업지역을 평안남북도, 개성, 남포로 축소하기도 하였다.

수혜대상자의 선정은 북한의 요청 혹은 민간단체의 사업구상에 대해 북측이 제공한 수혜대상 명단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에 세밀히 조사된 상황보고서를 중심으로 수혜자를 선정하기 보다는 양측의 협의에 따라 수혜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라. 단계별 사업집행방법 및 감독(monitoring)방법 설정

특정사업의 집행을 단계별로 계획하고, 이러한 계획대로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가를 감독(monitoring)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사업에 필요한 물자지원의 일정을 가장 중요시하게 된다. 사업의 감독방법은 주로 대표 및 전문실무자의 방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업구상단계에서 세밀하게 단계별 방문일정을 정하는 것은 현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 현실상 자유로운 방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방북단의 구성 및 일정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협의를 위한 접촉도 전화나 팩스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해 남북 당사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국의 제3자를 거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사업이 단순지원사업에서 병원현대화작업 등 협력사업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업운영에 대해 북측과 ‘합의서’를 교환하게 되었고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병원 현대화 및 제약공장 사업은 주로 건축일정을 중심으로 사업집행계획이 수립되었다. 굿네이버스의 안과병원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운영계획은 크게 병원의 건립과 건립 이후의 운영계획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필요인력과 그들에 대한 교육, 장비 기증도 포함되어 있었다.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어깨동무 어린이 영양증진센터의 운영계획에는 각 분과별 인력 충원과 기자재 조달, 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었다.⁴³

마. 사업평가방법 및 지표설정

이제까지 국내민간단체의 대북사업 평가보고서는 주로 지원내역서를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계획단계에서 사업종료 이후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설정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사업의 집행과정을 챙기기에 역부족인 인력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전체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직접 대북 사업장 방문 및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 및 전문실무자들의 개인적 판단이 매우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적절한 상황이 아닌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즉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지표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사업평가를 위해 투입할 인적 및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⁴³ 최세문의 단체실무자 인터뷰 내용 참조, 최세문,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사업의 평가,” pp. 40-41.

바. 소요예산 및 감사방법

사업집행에 필요한 예산의 추산은 필요 물품 및 자재의 조달가격을 중심으로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에 사무실 운영 및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비용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후원금, 개인 및 기업을 포함한 기관의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자체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된다. 대북지원에서 재정지원 이외에 의약품, 의료기기와 같은 물자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물품과 기자재는 주로 기업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기증을 받는다. 사업수행 이후 회계감사는 단체의 일반적인 회계감사절차를 거치고,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절차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3. 사업추진과정의 감독(Monitoring)

국내 민간단체 특정사업의 집행과정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북측 집행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인수증 및 분배명단 자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업장에 대한 직접 방문을 통한 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업집행과정에서 북측과 체결한 「합의서」와 달리 추진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어깨동무 어린이 영양증진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초기에는 설계와 의료장비 지원은 남측이 맡고, 건축

자재수급과 시공을 사업파트너인 어린이 영양관리연구소에서 맡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북측 사정이 여의치 않아 건축자재 까지 남측에서 조달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여러 민간단체의 협력사업 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북측이 추가 물자조달 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북측의 중간관리자들이 자원 확보의 고충을 얘기하면서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민간단체들이 이를 수용하기도 하였다.

사업이 예정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첫째, 남측과 북측의 사업당사자들의 내부사정보다는 남북한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 등 외부변수가 매우 크게 작용하여 왔다. 2003년도의 경우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으로 방북제한이 이루어졌다. 굿네이버스의 안과병원 신축사업도 방북제한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 2004년 7월 이후 북측이 남북당국간 대화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민간 단체의 방북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단체의 사업협의를 위한 방북이 평양이 아닌 금강산 및 개성공단 등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언제라도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돌발요인에 의한 남북한 당국자간 교착상태는 교류협력의 전면적인 퇴보를 유발하기도 한다.

둘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남북 양측 실무자들이 상대의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하고, 상호 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민간단체의 협력사업이 단순한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양측의 관련 여건에도 적합하여야만 한다.

이 부분은 남북의 문화적 차이로 자존심과 전문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병원 건설과정에서 공법과 재료, 근로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설계시 협의된 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초기에는 자재공급은 100%는 북측에서 담당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0%였고 예상치 못한 자재를 구입해야 한다든가 그마저도 적시에 공급하는데 애로사항을 겪은 것은 북측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점과 북측 또한 자존심 때문에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설 일정이 지연되었다고 생각한다.⁴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어린이 시럽공장 지원사업의 경우 양측이 이해부족과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협의 부족으로 인해 지원장비가 북측이 요구했던 것과 다른 수준으로 제공되었다. 즉 북측이 어린이 용 물약공장에 필요한 장비는 음료수준의 점액질이 없는 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남측이 제공한 시럽제조 장비는 남측 의약품과 같이 점액질이 많은 약품 생산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⁵ 이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양측 모두 사업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수혜기관이 합의된 일정에 대한 준수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측의 경우 일정에 대한 개념이 미흡하여 예정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외부적인 변수들이 개입되기 때문이기도 하나, 일정이 지체되거나 중단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북측당사자에게 돌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원 초기 한민족재단의 나진선봉 병원현대화사업의 경우에는 양측이 합의서를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담당인력 교체를 통해 이전의 합의사항 준수를 회피하기도 하였다.

⁴⁴ 위의 글, p. 41.

⁴⁵ 김진숙(어린이의약품지원운동본부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2004년 10월 17일.

넷째, 국내 민간단체들이 국제기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된 데에는 협상과정에서 분배상황 확인이나 현장기술지도와 같은 조건을 덧붙이면 협상의 진행이 어려워지고 복잡한 절차를 요구받기 때문에 그 간 지원단체들은 국제기구나 국제 NGO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도주의원칙(humanitarian principles)⁴⁶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당국은 외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북한주민과의 직접 접촉을 통제하였다. 이에 대해 국경없는의사회는 북한에 의사를 파견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직접접촉을 통한 의료실태 파악을 지원의 원칙으로 설정하였기에 북한사업을 중단하였다.⁴⁷ 반면에 국내 민간단체들의 경우에는 북한의 특수성을 이해하면서 사업을 전개하였고 가능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더하여 북한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자세와 함께 언론에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면서 북한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긍정적 내용을 널리 알리려고 했다. 이러한 결과 유진벨 재단과 같은 국내 민간단체는 북한 각 지역에 산재한 결핵요양소, 시군인민병원까지 현장에 접근하여 왔다.

⁴⁶ 인도적 지원 원칙(Humanitarian Principles)은 ①소요산정(assessed needs)에 따라 전반적인 인도적 위기상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인도적 지원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전달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③위기상황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④접근이 허용되는 지역에만 지원이 이루어진다, ⑤주민들의 인도적 요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⑥지역단위의 역량 형성을 지원한다, ⑦지원계획의 수립과 집행단계에 수혜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⑧국제 실무요원의 충분한 역량 강화를 모색한다, ⑨국제인도주의 기구들의 보건과 신변안전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⁴⁷ 이상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북한당국과의 협력 관계연구 (1995~2001),” 가톨릭대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 67-71.

가. 현장방문

지원실적이 누적되면서, 민간단체들의 모니터링 방북이 허용되었으며, 2002년 이후에는 대규모 방북이 성사되었다. 국내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방북이 확대되면서, 각 단체들은 후원자들을 동행하는 방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니터링을 명목으로 한 방북단은 소수 전문가들이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상당수는 후원자 혹은 사회단체장 등 민간단체들의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단체들이 방북단의 일정 조정에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의 일정들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북한당국이 일정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임박하여 방북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남측 방북단의 일정조정도 민간단체들에게 매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훈련된 전문가들에 의한 반복적인 방문지도가 필수적이나 복잡한 방문절차로 인해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민간단체들은 현장방문시 관계자 면담을 포함한 방북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는 통일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후원자들에게 공지하기 위한 것이다. 각 단체들은 주로 매 지원현황 및 현장방문 동행자들의 참관기들을 기술하고 있다. 유진벨재단은 홈페이지와 방문보고서 형식의 소식지에 북한 지원사업장의 현장방문에 관한 상세한 자료들을 소개하여 왔다. 즉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에 대한 소개와 지원물품 및 방문시 활동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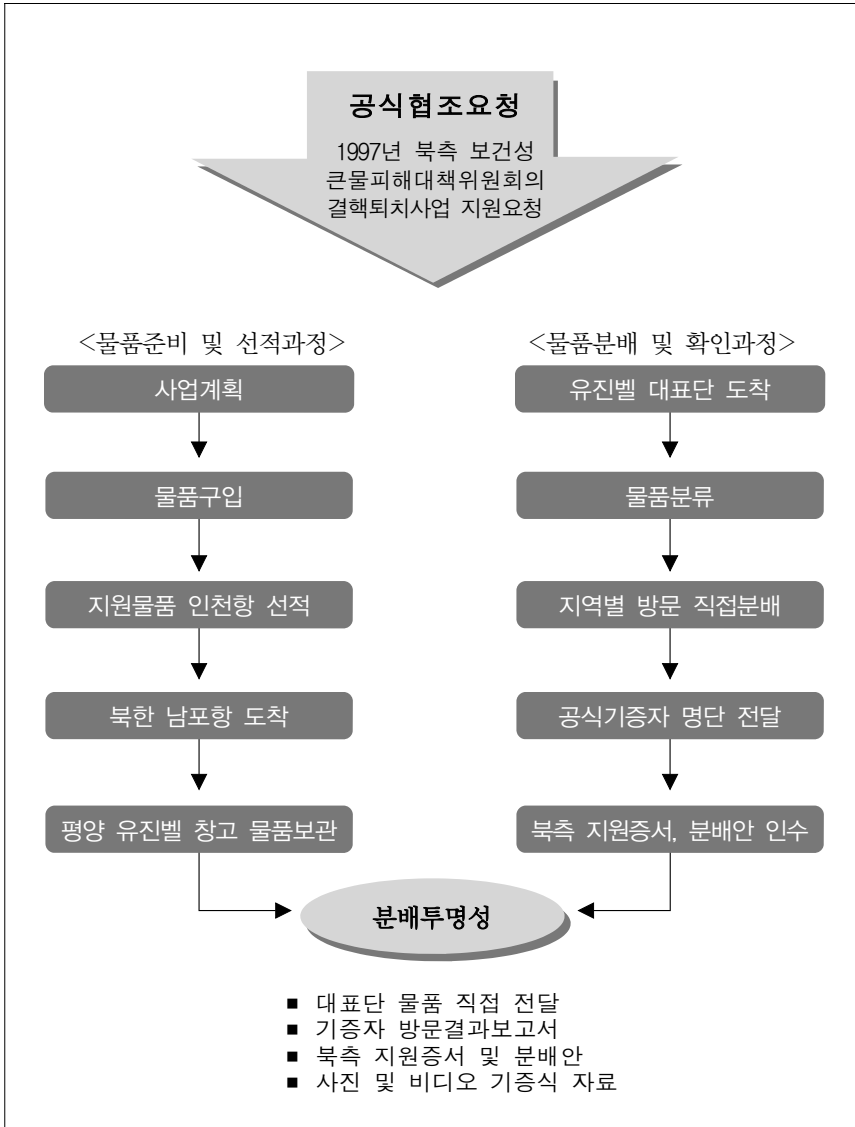
나. 분배투명성

대북지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지원물품 등 재원의 사용내역과 전달과정에 대한 공개, 즉 분배투명성의 확보 일 것이다. 대규모 식량지원의 경우에는 군사용으로의 전용가능성이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대북사업의 경우에는 군사전용 가능성은 크게 염려되지 않았다. 이는 지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지원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며 가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의 분배투명성이 보장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추진된 대북협력사업자인 민간단체들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배투명성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즉 북한의 사업당사자와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수증, 북측의 사업당사자가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 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 결과보고서, 북한상대방과의 의향서를 포함한 분배투명성 확보계획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원초기에는 단순물품지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져 왔었고, 양측 간의 사업적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물품의 분배확인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지원물품의 확인서는 수혜기관이 직접 교부하기 보다는 북측의 협상창구인 민족화해협의회나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민족경제인연합회 등에서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인수 확인서는 민간단체들이 통일부에 분배투명성 확보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표 V-1> 유진벨재단의 분배투명성 확보노력



출처: <<http://www.eugenebell.org>>.

관련 문서이외에 분배확인인 민간단체의 대표 및 관련실무자들의 방북시 구두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원물품의 사용확인인 간접적인 경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즉 지원물품의 소모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기자재 소모품이 이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사용되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장비의 가동률을 추산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이 해외개발협력사업과 달리 지원단체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북한에 전달하면 북한 상대방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체계이므로 현장접근에 대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추가 물품을 전달할 때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인 물품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단순한 물품 전달확인에 그치지 않고 이후 지원 물자의 흐름 확인, 사용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조사나 사용 후 검사결과 확인 등 검증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⁴⁸

무엇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단체들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빈번하고 집중적인 접근이 필요하나 폭넓고 자유로운 현장 접근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대북지원사업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내 민간단체중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진벨재단은 지역 방문을 통한 분배투명성 확보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개발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담당자가 현지국가에 상주하거나 상주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활동과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업의 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북지원사업의 경우 자유로운 접근 혹은 정보제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⁴⁸ 김형석, “대북 인도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민족복지포럼 자료집 1: 남북문제와 보건의료』 (서울: 한민족복지재단, 2001), p. 22.

에 모니터링의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수의 국내 민간단체들은 북한사업당사자를 신뢰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모니터링은 사전협의된 일정에 따라 후원자가 남측 사업담당자와 함께 방북하여 지원물자가 해당 수원기관에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장비와 기자재의 경우에는 지원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나, 소모물품인 경우에는 북측 당사자가 제공하는 분배명단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당국도 외부의 지원을 계속 확보하려는 실리적 필요성과 지난 10여 년 동안 지원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⁴⁹ 민간의 요구를 조금씩 수용해 나가고 있다.⁵⁰

민간단체들은 대북사업을 위해 통일부로부터 사업자 승인과 사업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통일부 사업 승인과는 별도로 인적교류와 기술교류가 이루어졌다. 일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는 달리 농업축산이나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단순 물자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원을 병행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의 구분이 어렵다. 물론 지원 초기에는 의료기구나 농축산기구를 지원한 경우 북측 상대방이 활용방법을 몰라서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자재의 지원인 경우에는 이를 작동하는 기술인력들의 방북이 병행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수술장비나 진단용 의료기기는 장비 제공과 함께 기구를 작동하고 진단하는 데 필요한 학술 및 기술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농업개발사업의 일환인 월드비전의 씨감자사업의 경우에도

⁴⁹ Eric Weingartner, "NGO Contributions to DPRK Development: Issues for Canad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Pacific Policy Papers 7*, Institute of Asian Research,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⁵⁰ 이상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북한 당국과의 협력 관계 연구," p. 53.

온실건설 및 기술지도 점검을 위해 온실기술자, 수경재배기술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농기구기계수리공장사업을 추진해 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측으로부터 농기구합작생산사업방식의 남북경협사업으로 발전시키자는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 V-2>에서와 같이 민간단체들의 협력사업이 확대되어 기술장비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장비 사용 기술전수 및 관련 전문인력들 간의 학술회의들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비로 직접 시술을 하고, 환자에 대한 치료방침과 예후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북측 관련당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화의 숲의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양묘장관련 공동학술회의들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당기술 전문가들의 교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보다 심도 있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협력사업의 지속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공감대 및 양측 간의 신뢰 형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V-2> 의료분야 협력사업과 기술지원현황

단체	의료분야 협력사업과 기술지원
한민족복지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병원(평양제1인민병원, 평안북도 신의주) 현대화(2000.11) 및 의약품 지원사업, 어린이심장병센터 설립, - 평양의학대학병원: 진료 협력방안 토의, 환자진료, 수술집도, 학술교류, 세미나, 의료장비설치(2001.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정성제약 공장의 정제 및 수액제 생산설비(2002.11~현재) - 평양직접자병원내의 임상검사, 안과, 구강, 고려의학병원에 대한 현대화사업(2003.12) - 남북 민족의학 학술토론회(2003.10) 주제: “민족의학의 현재와 미래”(남측에서는 한의학의 현황과 미래, 표준한약개발연구, 암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방안, 남측 한방병원의 실태, 사상의학의 현황 등 5개 분야 발표) - 제5차 평양의학과학도론회(2003.10)/제6차 평양의학과학도론회(2004.5)
유진벨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의과대학에 ‘복강경수술’ 기술제공(1999) - 평양직접자병원 의사 3명을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으로 초청, ‘구급 및 심장소생술’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 실시(1999) - 관산전문결핵병원에서 수술실 및 수술용 의료장비에 관한 세미나 개최 - 사리원결핵환자들을 대상으로 ‘결핵세미나’ 개최 - 결핵요양소 20여곳을 방문하여 ‘결핵실험실 교육’ 실시 - 병원내 수술실 지원사업(2001.5)
굿네이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제2인민병원내의 아동병원지원사업(2001~현재) - 평양심장병원 신축사업(2004~) - 정성제약연구소 주사제 생산설비 지원사업(2003~현재) - 평양 안과병원 건립사업(2002~현재)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약(정제, 시럽제) 설비 지원을 위해 약사들이 방북하여 북측의약사들에게 설비가동에 대한 기술이전(2001~2003) - 평양시내 구역병원 현대화사업을 위한 의료장비 지원 및 의료진 방북(2004~)
남북어린이어깨동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어깨동무 어린이병원 건립(2002.2~2004.6) - 영양, 의료전문가 간담회 2회(2003.2)

출처: 김진숙,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고찰.”

4. 자체 사업평가

민간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추진과정의 전체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북사업 환경상 사업 계획단계에서 사업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단체들의 사업평가는 주로 지원의 직접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효과에 대한 기록은 직접 조사를 거쳐 확보한 것보다는 지원단체가 북측 사업당사자로부터 전달받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유진벨재단의 경우 강원도 원산시 소학교 B형 간염 예방사업결과를 북한 보건성이 조사하였으며, 접종아동에 게서 B형 간염 면역율을 나타내는 항전률이 95%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한다.⁵¹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경우에는 어린이 영양연구소로부터 “년간 애기젓 500여톤을 생산하여 평양시 육아원에 50명분, 평양시 5개 구역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 1,300여 명분을 매일 정상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후 0달부터 3달되는 젓이 없는 어린이 450여명에게 3~5달 동안 애기젓 1호를 먹인데 의하면 다음의 지표들이 모유영양아들과 차이가 없었다. 발육-몸무게(무게/나이, 무게/키), 키, 리병률-설사증, 감기 및 기관지폐염, 소화상태-대변회수, 대변성상, 식욕 등이 모유 영양아와 다름이 없었다.”는 결과를 접수하였다.⁵²

굿네이버스의 축산지원사업은 북측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보도하여

⁵¹ 최세문,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사업의 평가,” p. 50.

⁵² 북한 의학과학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측은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공유유급식 사업에 대해 『애기젓 공급정형과 그 효과 실험자료』라는 문건을 통해 지원사업의 결과를 밝혔다. 위의 글.

왔으며, 구빈리 축산협동농장은 실제로 지난 몇 년 사이 큰 농가소득 증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빈리농장의 림귀남 지배인은 특히 젖소를 농가에 분양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물질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데, 농가당 2~3마리의 젖소를 분양하고는 “주기적으로 젖소의 건강상태와 우유 생산량 등을 평가, 그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농가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기존분배방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⁵³

둘째, 실제 사업의 결과를 진료실적, 검사실적, 수확량 등과 같은 양적 지표로 나타내기도 한다. 첨단 의료기자재의 경우 환자 검진실적을 통해 장비의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시키기도 하고, 남측의 료진의 직접 방문시 이루어진 의료기술 전수를 위한 시술실적을 강조하기도 한다. 월드비전의 경우에도 수경재배 사업에 대해 북한농업과학원이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면서 사업의 확대를 요청하여 왔다.⁵⁴

셋째, 시행중인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상결과를 부각시키면서 사업의 성과를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어린이애게동무가 지원한 어린이영양증진센터는 사업의 기대결과를 “첫째, 어린이들의 영양관련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현재 거의 유명무실화된 북한의 의료시스템을 어느 정도 복구하고, 진료 및 운영시스템

⁵³ <<http://www.ksm.or.kr>>.

⁵⁴ “건설 및 설비조립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끝냈을 뿐 아니라 첫 생산 시험에서 한 포기당 평균 20~30알, 최고 60~70알이 달리는 작황으로 매우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이것을 평양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면 약 20만 ha의 감자재배면적에 필요한 감자종자 생산보장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ha당 평균 30t 이상, 장기적으로 60t 이상의 소출을 올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감자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는 데 총 목적을 두고 이 대상을 확대하려고 한다.” 북한 농업과학원의 자체 평가 (2000.11)

< <http://www.worldvision.or.kr>>.

을 현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이후 운영과정에서 축적될 북
 녀 어린이들에 대한 임상진료기록은 지금까지 어느 국제기구도 확보
 하지 못한 생생하고 정확한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설정하였다.⁵⁵ 농
 업분야의 기자재 지원의 경우에는 농업방식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기
 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이양기와 같은 기계의 기종을 바꿀 경우
 에는 품종이나 재배방식도 동시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⁵⁶ 농업
 기자재 지원의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 국내관련 기업의 생산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단체들이 대북사업의 목표를 남북 간의 화해에 기여하
 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는 계량적인 지표로 측정하
 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는 각 단체들의 주관적인 인
 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개별 단체들은 계량적인 평가보다, 지원과
 정에서 북측의 인식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협력사
 업은 남북간 불신 해소와 신뢰 형성에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
 가된다. 예를 들어 지원사업장에 공동 현판을 다는 등 해당 주민이
 참여하는 축하행사도 이루어지고 있다.⁵⁷ 이러한 점에서 대북지원운
 동은 인도주의 실현과 함께 동포애의 실현, 상호불신 해소와 신뢰
 증진으로 인한 평화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⁸

⁵⁵ 최세문,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사업의 평가,” p. 51.

⁵⁶ 권태진(한국 농촌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의 자문회의, 2004년 10월 12일.

⁵⁷ “화기 넘친 모습들 통일이 성큼 온 듯,” 『중앙일보』, 2004년 6월 22일.

⁵⁸ 송경민, “대북 인도적 지원의 쟁점과 과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쟁점과 과제-북
 한 어린이 돕기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회 세미나 발표문 (2003.11.15), p. 6.

5. 향후과제

이제까지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협력사업은 지역사회개발보다는 북한 의료기관이나 제약공장, 농기계수리공장과 같이 평양, 신의주, 남포등과 같은 대도시에 소재한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2000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최대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단순지원사업이 수액제 공장, 병원 건립사업 등 대규모의 재정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종래의 의약품 단순지원사업에서 지원단체들이 하는 일은 모금된 재원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기업으로부터 기부 받아 북한에 보내는 일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설비나 병원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로 사업형태가 바뀌면서 교류협력의 형태가 다양해졌다. 고가 장비가 지원되면 장비의 사용법과 장비를 이용한 시술법 전수가 필요해 남측 전문기술진의 방북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민간단체들의 협력사업

<표 V-3>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사업의 연도별 사업의 유형 변화

단 체 명	연도별 사업유형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굿네이버스	의약품/의료기기 지원				평양 제2인민병원 개보수, 안과병원 건립			
남북어린이어깨동무	-	의약품 지원		-	-	어린이영양증진센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	의약품 지원		-	-	정제제조설비, 구역병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원				-	수액제 생산공장		
유진벨재단	-	-	-	-	-	결핵 퇴치 사업		
한민족복지재단	의약품/의료기기 지원				어린이병원 현대화		어린이심장센터 설립	

출처: 김진숙,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고찰.”

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사례에서 나타난 성과를 확대시키고,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단계별 사업목표 및 실행전략 수립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협력사업은 이제 분야별 우선사업순위⁵⁹에 기초하여 단계별 사업목표 및 실행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초기의 단순물품지원을 벗어나 개발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의 대북사업은 재점검되어야 한다. 즉 국내 민간단체의 협력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민간단체의 대북협력사업은 북한의 기존 분야별 체계 복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일회성지원으로 그치거나 부분적인 지원보다는 지역농업체계 혹은 지역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논의단계에서부터 북측의 세부 분야 실무부처가 협력사업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세부분야의 인프라를 재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 및 시설, 장비 등의 수요와 주민들의 분야별 수요 등 포괄적인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분야별 체계를 복구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우선순위⁶⁰를 설정하고, 이를 감안한 대북협력사업이 추진될

⁵⁹ 유럽연합국가들은 대북사업의 우선순위를 제도구축 및 훈련계획(institutional building and training programme),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sustainable management and use of natural resources), 지속가능한 농촌개발대책(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actions)으로 설정하였다.

수 있어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북협력사업이 개발구호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단위 사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지원의 경우 공중 보건학적 접근에 따른 지역사회 보건지원의 전략⁶¹이 필요하다. 국내 민간단체의 협력사업중 유진벨재단의 패키지프로그램(package program)⁶²과 같은 지역단위사업은 북한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효과

⁶⁰ 박상은,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주요 질병 대책,” 『대한의사협회지』, 제44권 제3호 (2001), p. 263.

1999년 북한보건의료협력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을 마치면서, 북한에 보건의료지원을 해오던 의료단체들이 함께 모여 북한의 질병퇴치와 보건의료지원에 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첫째, 북한의 보건의료문제는 식량문제, 에너지문제 등 북한의 다른 문제들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기에 우리가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단순히 질병 퇴치나 선진적인 의료기술 지원 이전에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둘째, 의학교육을 포함한 대북보건의료 교류협력활동은 시혜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상호협력 및 상호보완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앞으로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양질의 표준의약품들이 북한에 공급될 수 있어야하며 특히, 결핵약, 항생제 등 몇 가지 중요한 질환의 퇴치를 위해 우선순위에 입각한 약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기초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북한의 약품생산을 돕기 위한 의약품원료 지원, 제약공장 및 의료기기 공장의 건립, 최신 병원설비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우선순위의 결정은 북한 의료당국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하며 유아들에 대한 영양공급, 결핵퇴치를 위한 노력, 구충제 지원, 말라리아 및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노력, 항생제 지원 등이 중요한 우선순위로 논의되었다.

⁶¹ “첫째, 사업의 대상자를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국한하지 않고 의료를 요구하지 않는 지역사회 주민에게까지 확대한다. 둘째, 환자를 대상으로 하던 전통 의학에서 지역사회의학으로 확대한다. 셋째, 단편적인 신체구조에 대한 접근방법에서 질병예방사업, 환경위생개선 등 총괄적인 의료로 확대한다. 넷째, 지역사회주민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추구한다. 다섯째, 전통의학에서 결여되어 있는 효율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윤환,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보건의료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아주대의대 북한보건의료지원연구팀 (수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001).

⁶² 패키지프로그램에 대해 유진벨재단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특정 장소에 지원하고자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기증자나 기증기관의 신분과 기증의도를 강하게 심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http://www.eugenebell.org/kor/business/business_north_2.htm>.

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결핵치료를 단순약품지원으로 머물지 않고, 복합적인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결핵의 총체적,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어린이의약품지원운동본부도 대북협력사업을 평양대동강구역에 집중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체계 복구의 효과를 추구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금강산특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농수산포럼을 중심으로 한 농업개발협력사업도 지역단위사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즉 개별단체들이 서로 다른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협력사업의 방식으로 보인다. 남측 통일농수산포럼과 북측 금강산 국제관광총회사 간의 협력사업으로 진행중인 삼일포 협동농장에 대한 지원은 온실건립, 양묘장, 과수농장, 벼농사, 시범포사업, 양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유기농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흙살림 미생물공장 건립, 양돈 사업 등 사업결과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된다. 금강산지역에 대한 개발지원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현대’라는 안정적인 창구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조정하며, 북한지역관리자들이 원하는 기술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적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⁶³

지역단위 사업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지역단위의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식량난으로 인해 중앙배급체계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북한당국은

⁶³ 권태진(한국 농촌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의 자문회의, 2004년 10월 12일.

1996년부터 중앙공급체계를 지역단위 책임제로 변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조사업방식이 외부가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하며 자체적인 의식변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북한사회의 자체역량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까지 서방의 개발지원이 추진되어온 제3세계국가와 동구권의 사례를 보면, 수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대북지원은 지원의 주체와 지원의 대상이 북한의 자체 역량 형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충분한 인식의 공유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북협력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사업의 결과가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전염성 질환에 대한 집중관리대책과 함께 환경위생 상태 개선을 위한 식수 및 위생사업, 방역사업 등 협력사업의 수혜대상이 보다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바, 이제까지 민간단체들이 대북협력사업을 통해 형성한 신뢰를 기반으로 당국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향후 민간단체 대북협력사업은 지속가능성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의 기존 대북협력의 형태는 남측의 참여가 중단될 경우 북한 사업당사자가 스스로 사업을 지속시켜 나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지원과정에서도 기존에 지원된 장비 및 설비와 관련해서 남측에서 지속적인 후

속 지원이 없으면 이미 진행되었던 사업의 효과마저 중단될 정도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⁶⁴ 따라서 현재의 협력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사업추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북한의 역량과 국내 민간단체의 사후관리 능력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협력당사자의 역량개발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북한의 상황에 맞는 기술이나 장비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첨단치료기술 이전의 경우 남한의 의료진이 방북해서 북측 의료진에게 환자를 직접 시술하고 예후와 치료 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온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한계점이 많을 수 있다.⁶⁵ 해외원조사업의 경우에도 개발도상국에 기증한 기자재나 설비가 복잡해서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부품이 없어서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못한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시설 건립과 같은 일회적인 프로젝트 원조보다는 다소 규모가 크더라도 북한사회 내의 기존 프로그램 안에 녹아들어 갈 수 있는 지원이 지속가능성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⁶⁶ 북한의 경우 협력당사자가 민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당국의 목적에 의해 유용된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수의 제3세계 수혜대상국에 비하여 북한은 외부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므로 대북 협력사업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에 있어 북한 당

⁶⁴ 김진숙(어린이의약품지원운동본부 사무국장)과의 자문회의, 2004년 10월 7일

⁶⁵ 김형석 외, 『한민족복지포럼 자료집 1: 남북문제와 보건·의료』 (서울: 한민족복지재단, 2001), p. 88.

⁶⁶ 최세문,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사업의 평가.”

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이다.⁶⁷

다섯째, 결핵사업이나, 위생 방역사업, 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 등 현재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단체들 간 새로운 협력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면, 최근 북한은 조선적십자중앙병원의 현대화 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별단체들에게 큰 규모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런 경우 지원단체들이 공동으로 ‘조선적십자병원 현대화지원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⁶⁸ 향후 민간단체들이 동일한 지역 또는 동일한 수혜대상을 상대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단체들이 공동프로그램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여섯째, 국내 민간단체들의 남북협력사업들이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반환경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자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창고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추수후 손실률이 15~20%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지원의 경우에도 지원의약품의 저장 및 운반시설이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 협력사업의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추가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⁶⁷ 이상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북한 당국과의 협력관계 연구,” p. 3.

⁶⁸ 김진숙과의 자문회의, 2004년 10월 17일.

나. 민간단체의 전문성 강화

대북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민간단체들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집행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대북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실무진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체들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첫째, 각 개별단체들의 실무인력들의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한 실무교육 및 연수기회의 확대와 같은 직접적인 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의 상근직원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각 개별단체의 실무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단체의 협력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들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전문자문단은 각 개별단체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자문단의 경우에도 대북협력사업 현장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사업여건을 파악하고, 사업의 지속필요성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자문단이 특정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세부영역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단체들의 협력사업에 대한 전문자문단은 보건의료 혹은 농업개발 등 세부분야별로 공동 구성되어 각 개별단체들의 요청들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자문단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북한 분야별 현황 및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추적, 전문인력간의 상호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체계적인 사업평가 방안 마련

대북지원 국내 민간단체들의 협력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평가내용이 사업에 환류 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구상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양측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평가기준과 달성목표를 수립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협력사업의 참여자인 국내 민간단체와 북측 기관이 모두 사업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한 증거를 공유할 수 있어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특수한 지원환경상 수혜주민에 대한 직접접촉을 통한 만족도 조사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관련 중간관리 및 실무자들의 만족도 조사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사업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 상주하면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 온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은 분야별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사업을 통한 결과를 보여주는 통계, 추진과정상의 어려움 등이 포함되어 있다.⁶⁹

⁶⁹ Baptiste Bobillie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forestation in DPRK, Triangle. G.H. 2002; The Green Table, Goat Production in the DPRK, 2002; UNDP, Status of Agricultural Activities under AREP - 1995 to October 2001; Arthur Wellinger, Rural Energy Production - Biogas Plant - A sustainable source of energy for cooperative farms, ADRA, 2003.

라. 성인지적 개발협력사업의 개발

국내 민간단체들은 새로운 개발협력사업 분야를 개발할 때 성인 지적 관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유엔인도조정국이 발표한 대북 인도적지원 및 개발지원에 참여하는 기구들의 성인지적 정책에 보면, 이들 기구들은 기본적으로 성평등적 정책에 관심을 갖고 사회체계를 정비한 북한당국의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태도에 주목한다. 하지만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에서 각 세대의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당국의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공적 및 집단적으로 주어지는 제도적 뒷받침이 모두 붕괴되었다. 국가로부터 배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여성들의 부담은 여성들의 개발권, 보호권, 참여권(women's rights to development, protection, and participation)을 위협하였다. 1995년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어린이들의 건강은 크게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북한당국이 이들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은 것과 함께 국제사회 기부자들의 후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표 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개도국 지원의 경우와 달리 국내 민간단체들도 여성의 재생산 즉 출산과 관련된 여성보건사업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미숙아 및 2.5Kg이하의 저체중아 출산률의 증가는 임신수유부들이 심각한 영양부족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경제개발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북한여성들의 경우에는 건국초기부터 전후 경제복구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 사례를 바탕으로 빈곤탈피 및 지역개발에서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국내 민간단체들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북한의 상황을 재분석하여 여성들의 권리침해를 덜어줄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출산과 관련된 보건의료사업은 직접적으로 여성의 문제를 접근하는 협력사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 북한당국도 국제사회의 관심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홍보하던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를 복구시키기 위한 협력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집 2002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재생산건강조사보고서』와 2001년 『애기정성병원에서의 모유수유 관리와 장려(산원일군들을 위한 18시간 과정안)』⁷⁰에서도 이러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유엔아동기금이 북한의 분야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접종사업, 여성들의 출산관련 보건지원, 영유아에 대한 지원, 위생 및 식수사업 지원에 대해 북한당국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⁷¹

⁷⁰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의 영문책자 번역본(*Breastfeeding Management and Promotion in a Baby-Friendly Hospital(an 18-hour course for maternity staff)*)으로 발간되었다.

⁷¹ UNICEF, UNICEF Fact Sheet - EPI, 2003; UNICEF, UNICEF Fact Sheet - Nutrition and Care, 2003; UNICEF, UNICEF Fact Sheet - Essential Drugs, 2003; UNICEF, UNICEF Fact Sheet - Maternal and Child Health 2003; UNICEF, UNICEF Fact Sheet - Water & Environmental Sanitation & Hygiene Education.

<표 V-4> 1996~2002 OECD DAC 회원국/기구의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의 분야별 분포

DAC Sector	CRS code	개발원조위원회		남한
		Amount in millions of USD in 1998~2001	% of Total	
General Health	-	0	0.0%	9.8%
Basic Health	Basic health care	2.254	40.2%	55.0%
	Basic nutrition	0.962	17.1%	0.0%
	Infectious disease control	0.965	17.2%	24.7%
Population Programme	Population policy and admin. mgmt	0.587	10.5%	0.0%
	Reproductive health care	0.845	15.1%	0.0%
Total amount in 1998~2002		5.613	-	1997 ~ 2003.10

출처: 최세문,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사업의 평가,” p. 31.

결 론

최근 북한당국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유엔인도지원조정국을 통한 통합지원호소(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개별기구나 개별국가 단위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내 상주하고 있는 유럽 등 국제민간단체들의 사업 환경을 매우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대한 정책을 전환한 배경을 북한당국은 긴급구호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10여 년 동안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개발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과 지원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접근(access)과 감독(monitoring) 요구수준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북지원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민간단체들은 우리 정부와 함께 대북협력사업에서 영향력 있는 주체로 성장하였다. 민간단체들의 협력사업이 농업개발, 보건의료, 환경분야로 확대되었고,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대북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민간단체들은 북한협력민간단체협의회를 조직하고, 2004년 9월에는 민관정책협력의 틀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정책협의회를 구체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우리정

부와 민간단체의 대북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또한 대북사업의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대북사업에서의 공동방침, 사업의 기획·실행·평가 가이드라인,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어왔다.⁷² 또한 대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단체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개별 단체들은 각 사업에 대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분석, 검토한 지침(매뉴얼)⁷³을 마련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자체 내의 경쟁과 대북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체간의 정보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제까지 대북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과정에서 전적으로 대표 및 실무자들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대북사업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협상력과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⁷⁴

인도지원을 매개로 한 방북단의 급속한 확대는 남북 분야별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촉진해 교류 상대의 대상과 범위가 더욱 심화,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북사업의 협상창구가 북한 대남기관, 종교기관 등에 한정되었으나, 협력사업이 진행되면서 실무기관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향후 대북협력사업에 지역 단위 수원기관이 협력사업의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국내 민간단체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남북 간의 신뢰

⁷² 이종무, “통합과 조정을 통한 전략적 접근: 공동프로그램 추진 방안,” 우리민족서로돕기 평화나눔센터 1주년 기념 학술회의 (2004.12.7).

⁷³ “왕진가방 매뉴얼,” 『북한보건의료네트워크』 <www.nkhealth.net>.

⁷⁴ 최대석, “인도적 대북지원에 있어서 국내 NGO들의 역할과 과제,” p. 16.

형성과 화해에 기여하여 왔다. 향후 민간단체들은 북한지역 사회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사회의 자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시범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단체들이 전문성을 보완하고, 대북협력사업의 구상 및 논의단계에서부터 북측협력당사자와의 협의 못지않게 대북사업의 여건에 대한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한 내부논의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북사업의 평가 이후 이를 체계적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기간에 대북 협력사업의 결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기본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체들은 사업결과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북한이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보여줌으로써, 대북협력사업이 정부나 기업차원의 대규모 협력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이금순. 『대북 인도적 개선방안: 개발구호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_____.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전성우. 『남북한 사회통합의 길: 그 현황과 전망』. 서울: 금창출판사, 2001.
- 최수영 · 임강택 · 오승렬. 『남북한 농업교류 · 협력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한국국제협력단. 『지구촌의 한인들-민간단체의 해외원조활동』.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1997.
- Arthur Wellinger. Rural Energy Production - Biogas Plant - A sustainable source of energy for cooperative farms. ADRA, 2003.
- Baptiste Bobillie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forestation in DPRK. Triangle. G.H. 2002.
- CESVI. Situation of Anti-Epidemic Stations in Kangwon Province 2002.
- Charles-Antoine Hofmann, Les Roberts, Jeremy Shoham and Paul Harvey. *Measuring the impact of humanitarian aid: A review of current practice*.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Humanitarian Policy Group Report 17, June 2004.
- Children's Aid Direct. Greenhouses for Nurseries and Kindergartens in South Pyongan.
- Concern. Integrated Pest Management by using bio-pesticides

- to improve the sustainability and output of cabbage production in DPR Korea, 2003.
- DPRK Ministry of Public Health. Report on the DPRK Nutrition Assessment October 2002.
- EC. *The EC-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Country Strategy Paper 2001~2004.*
- Eric Weingartner. *NGO Contributions to DPRK Development: Issues for Canad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Pacific Policy Papers 7 Institute of Asian Research.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Hazel Smith. Five Year Review of the CARITAS Programm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ARITAS.
- Jeremy Shoham. *Assessing the impact of humanitarian assistance: A review of methods in the food and nutrition sector.*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Background Paper for Humanitarian Policy Group Report 17, 2004.
- OECD DAC.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Guidelines and Reference Series 2003.
- UNDP. Status of Agricultural Activities under AREP - 1995 to October 2001.
-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3.
- UNOCHA. *Gender Policies of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Organisations Work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3.12.9.
- WHO. WHO Short-Term Consultant List 1999~2002.

2. 논문

- 고성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과 교류협력 확대 연계 방안: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3집 (2002.12).
- 김경숙. “남북한 인적교류 실태 및 개선방안.” 통일정책연구소. 『북한조사연구』. 제7권 제2호, 2003.
- 김광휘. “국내 NGO의 대북지원사업과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근식. “‘북한식’ 민간단체의 현황과 변화 전망: 남북 교류·협력의 관점에서.”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평화연구』. 제11권 1호, 2002.
- 김동선. “남북 체육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연구.”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 제43권 제1호 (2004).
- 김영호. “민간 대북 지원활동의 성과와 향후 전망.” 『교수논총』 제34집 (2003.12).
- 김영훈. “민간단체의 농업분야 대북지원 사례와 과제.” 『농어촌과 환경』 69 (2000.12).
- 김태국. “김대중 정부 통일정책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학성. “남북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 -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남북교류협력 정책토론회.
- 김형석 외. “한민족복지포럼 자료집 1: 남북문제와 보건, 의료.” 서울: 한민족복지재단, 2001.
- 김효은. “남북한 교류협력과 민간의 대북지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남정자 외.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 활성화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민성길 외. “남북통일 후 의료문제와 대처방안.” 『대한의사협회지』, 제44권 제3호, 2001.
- 박인화. “동서독보건협정의 교훈과 남북한 보건협력방안.” 서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5.
- 박진원. 『북한어린이 지원사업 사례발표』. 서울: 민주평통, 2003.
- 박태영.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한 동기·배경·활동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999.12).
- 배성인·이경국.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과정과 특징: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제1호 (2003).
- 백화중. “보건의료산업의 남북협력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00).
- 송경민. “대북 인도적 지원의 쟁점과 과제.” 민주평통. 『분단·여성·평화』 통권 제7호 (2003.12).
- 양문수·김학성. 『신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 / 남북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사업 추진방안』. 남북교류협력 정책토론회.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2003.
- 양범진.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북한어린이 건강실태 보고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02, 2003).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대북인도적 지원, 교류협력 사업과 북한의 변화.” 평화나눔센터 창립기념 정책 토론회 (2003.12).
- 이상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북한 당국과의 협력관계 연구(1995~2001).” 가톨릭대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 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교류협력의 과제와 전망.” 한국기술사회. 『기술사』. Vol. 36, No. 5, 통권 170호 (2003).
- 이윤환 외.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보건의료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

- 한 정책방안.” 아주대의대 북한보건의료지원연구팀. 수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001.
- _____. “북한 보건의료분야의 인도적 지원방향.” 통일부 연구용역 (2002).
- 전우택 외. “국내 NGO의 대북보건의료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통일연구』 제6권 제1호 (2002).
- 정현백 외. “남북화해와 NGO의 통일운동.” 『남북한 교류(화해) 협력과 NGO의 역할』. 통일연구원 · 서울대 통일포럼 공동학술회의 (2004).
- 최대석. “인도적 대북지원에 있어서 국내 NGO들의 역할과 과제.” 『남북한 교류(화해) 협력과 NGO의 역할』. 통일연구원 · 서울대 통일포럼 공동학술회의 발표문 (2004.12).
- 최세문.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사업의 평가.” 서울대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황나미. “북한의 우선순위 보건문제와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89호, 2004년 3월호.
- ADRA한국지부 · 아시아재단.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과 미래” (2004.9).
- USAID. “Standardized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Relief and Transitions(SMART): An Inter-Agency Initiative Improving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Evaluat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August 9, 2002.

3. 기타

- SDC DPRK. Fact Sheet - The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2003.

The Green Table. Goat Production in the DPRK, 2002.
UNICEF. UNICEF Fact Sheet - EPI, 2003.
_____. UNICEF Fact Sheet - Essential Drugs, 2003.
_____. UNICEF Fact Sheet - Maternal and Child Health,
2003.
_____. UNICEF Fact Sheet - Nutrition and Care, 2003.
_____. UNICEF Fact Sheet - Water & Environmental
Sanitation & Hygiene Education.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접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근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근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형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함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형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형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최의철·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최의철·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책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책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책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윤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운,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